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ten vertical bars of equal width. The top half of each bar is a solid red color, and the bottom half is a light gray color. These bars are arranged side-by-side, creating a striped effect.

2019

연차보고서

2020. 1

『2019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연구자문위원회를 개편했습니다. 주로 보험학자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연구자문위원회를 『보험연구분과』와 『보험발전분과』로 분리했습니다. 『보험연구분과』는 실질적인 연구자문이 가능하도록 보험업계 실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실무형 자문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보험발전분과』를 신설하여 비보험 분야의 전문가(교수, 변호사, 언론인, 공정위, NGO 등)로 구성했습니다. 『보험발전분과』는 보험산업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산업 및 보험연구원 발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위한 노력으로 전문 분야별 센터조직을 만들어 시장 현안과 수시 과제 중심의 연구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다수의 시장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와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CEO와의 맞춤형 소통 강화를 위해 『CEO Brief』를 창간했습니다. 외국계 CEO들을 위해서 영문과 중문으로도 번역해서 제공했습니다. 또한 보험은 무엇보다도 법리적 해석 등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보험법리뷰』를 창간하고 『보험법포럼』을 신설했습니다. 『보험법포럼』은 보험회사 법무팀 변호사, 5대 로펌의 보험법 담당자를 회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험업계 및 학계와의 소통 강화의 공간 마련을 위해 『산학보험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개원 및 기념세미나가 있었으며, 12월에는 실손의료보험을 주제로 제2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019년의 새로운 변화를 포함한 보험연구원의 다양한 활동을 정리해서 201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I 장에서는 2019년의 주요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계획과제, 용역과제, 『KIRI 리포트』, 『KIRI 고령화리뷰』와 올해 창간된 『CEO Brief』와 『KIRI 보험법리뷰』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제Ⅱ장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등 각종 연구행사를 소개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개인연금보험, 판매채널, 보험회사의 가치경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제Ⅲ장에서는 2020년 연구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4대 연구목표로 정하고 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Ⅳ장에서는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 관련 활동을, 그리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일반현황으로 연구조직과 각 연구부서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보험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역성장하고 있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초저금리 환경의 도래와 자본규제제도의 변화로 인해 재무적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높은 손해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산업의 역할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현안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 및 보험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보험연구원장

이정호

Contents

I. 2019년 주요 연구

1.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 신성장 모색

- 8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9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10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3. 경영 효율성 제고

- 14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15 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 전략
- 16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17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4. 건전성 제고 등 제도 선진화

- 20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2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5. 소비자 신뢰 확보

- 2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2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26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28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 29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피해보상에 대한 기반 여건 조성 마련
- 30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주요국 동향(2019)
- 31 자동차사고 대물피해책임 해외사례 연구
- 32 미술 관련 보험제도 개선연구

7. 금융·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

- 34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34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35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35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현황 및 분석

CEO Brief

- 36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 36 파과의 시대 보험회사 경영진의 고민, 혁신
- 36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2019년 보험료 수정 전망
- 36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37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
- 37 초저금리 환경의 영향과 과제
- 37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 37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방안 발표와 시사점
- 38 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 38 소비자 보호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38 핀테크 규제개선과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 39 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 39 신 지급여력제도와 자본관리 다변화
- 40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 40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 41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 41 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 42 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
- 42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 43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 43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 44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Contents

- 44 보험회사의 금리 딜레마와 시사점
- 4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 45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 46 해외 금융포용 동향과 시사점
- 46 중·고령층 보험·금융소비자의 정보격차 실태와 시사점
- 47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 47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 48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및 향후 과제
- 48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 49 여행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 49 신용평가에 반영될 보험회사의 혁신
- 50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 50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51 보험회사 환해지 비용의 특성
- 51 K-ICS 2.0 주요 내용과 과제
- 52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 52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 53 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
- 53 일본의 보험계약이전 규제완화 사례와 시사점
- 54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 54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의 유사성 및 사각지대 문제
- 55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56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
- 56 기준금리 인상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 56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주요국의 전망 및 시사점
- 56 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 57 EU 보험상품 판매지침(IDD) 시행과 시사점
- 57 최근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 원인 분석
- 57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개편의 내용 및 기대효과
- 57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추진 경과
- 58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 58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 58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보험산업의 시사점
- 58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변화와 시사점
- 59 중소기업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
- 59 렉테크(RegTech) 현황과 전망
- 59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향후 전망
- 59 마이데이터 산업의 내용과 과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60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 60 부채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모형위험관리
- 6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의 기대효과
- 60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
- 61 전속설계사 소득분포의 시사점
- 61 기온과 고령자 사망의 관계
- 61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행태와 시사점
- 61 고령화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위험요인 진단
- 62 보험소비자불만 개선을 위한 제언
- 62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원인분석 - 물적담보를 중심으로
- 62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 62 밀레니얼 세대의 보험 가입
- 63 외화보험 판매 동향과 과제 - 일본 사례의 시사점
- 63 기후변화 관련 해외 보험감독 동향
- 63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규제 연구와 시사점
- 63 부채적정성평가(LAT)부담 증가와 과제
- 64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글로벌 정책대응 동향과 시사점
- 64 우리나라의 연속적 소비자물가 하락 경험과 시사점
- 64 개인연금보험 판매채널 현황과 과제
- 64 벨기에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 65 미국 반력동물보험 감독 가이드라인 도입과 시사점
- 65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 65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와 시사점
- 65 일본 생명보험의 인터넷채널 현황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 66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와 함의
- 66 고령인구 이동권 확보 방안

Contents

- 67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보험수리적 비교 분석
- 67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내용과 과제
- 68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송 사례와 정책적 함의
- 68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외국인 이동의 중요성
- 69 사회적 노화와 건강: 성공적 노화를 위한 과제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 70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
- 70 스위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보장 사례 및 시사점
- 70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
- 70 영국의 퇴직연금 신호등(traffic light) 체계 운영사례 및 시사점
- 71 주요국의 사적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강화와 시사점
- 71 영국의 연금상당서비스(TPAS) 운영사례 및 시사점
- 71 개인연금상품 비교정보 제공 현황과 과제
- 71 선진국의 DC형 연금자산 증가와 자산배분 전략 변화
- 72 활동적 여가에 대한 고령층 참여의 특징
- 72 고령자의 시간활용과 삶의 만족도

KIRI 보험법리뷰 포커스

- 73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을 중심으로
- 73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문제 및 규제 개선 현황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

- 74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방법 관련 분쟁조정사례 연구
- 74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74 보험안내자료의 개선 필요성
- 7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 75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관련 해외 사례 검토

KIRI 보험법리뷰 특별기고

- 76 각국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입법적 개혁

II. 2019년 주관 행사

1. 정책·경영세미나

- 80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 81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 82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3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84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 85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86 인슈어테크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87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

2. 국제세미나

- 90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 92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
- 94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3. 포럼

- 98 IFRS 17에 따른 공정가치법 적용 시 불이행위험 반영 방법론
- 98 보험업계 규제 및 제도 현황과 과제
- 99 K-ICS 2.0 계량영향평가와 향후 과제
- 100 고령화-저물가 사회에서의 금융: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100 실버이코노미(Silver Economy)시대, 금융의 진화
- 101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의 쟁점 -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4. 산학세미나

- 104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현실과 과제
- 104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과제

III. 2020년 주요 연구 계획

1.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 106 전속설계사 판매조직 구조개편과 운영에 관한 연구
- 106 온라인 모집채널 정비 및 온라인 모집과 광고의 구분 방안
- 106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의 장단점 및 방안
- 106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7 미국 의료자문제도 조사
- 107 보험분쟁해결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107 인슈어테크와 보험소비자 보호

2.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108 보험산업 저금리 대응방안: 수익성 분석을 중심으로
- 108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 108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 108 주요국 보험회사 부실사례

3.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 109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방안 연구
- 109 미국·일본 개인연금보험 상품 동향과 시사점
- 109 퇴직연금의 이해
- 109 시민안전보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110 보험소비 트렌드 분석

4.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 111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111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 111 한국 사회의 신뢰도와 보험산업의 모델 해저드(1)
- 111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IV. 2019년 연구 관련 활동

- 114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115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 116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117 고령화리뷰
- 117 보험법리뷰
- 118 각종 대외 연구 활동
- 121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 123 산학보험연구센터
- 124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V. 일반현황

- 126 경영비전
- 126 연혁
- 127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128 임직원 현황
- 128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132 연구센터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2019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CEO Report 및 CEO Brief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포커스·이슈 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웹 계간지 『KIRI 고령화리뷰』·웹 격월간지 『KIRI 보험법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2019

I

2019년 주요 연구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신성장 모색
경영 효율성 제고
건전성 제고 등 제도 선진화
소비자 신뢰 확보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금융·보험 이슈 연구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보고서

세계경제는 2018년부터 무역과 산업생산이 감소세이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국면이다. 국내경제도 민간소비, 투자 등 민간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감소세로 경기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 환경

세계경제는 2018년부터 무역과 산업생산이 감소세이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국면이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기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여 2.9~3.0%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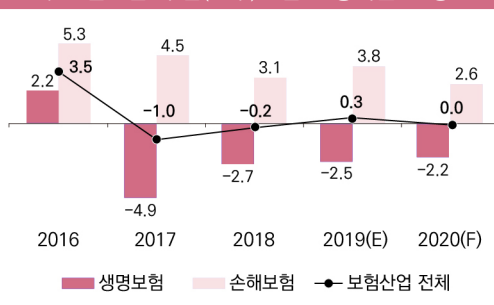
국내경제도 민간소비, 투자 등 민간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감소세로 경기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9월 -0.4%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관은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9년 보다 높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기 금리 역시 경기둔화 기조로 1%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경우 무역 및 생산 증가와 투자 확대가 일어나 2020년 경제성장률과 장기 금리가 예상보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0.0%로,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2.2%로 4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되며, 손해보험 성장률은 2.6%로 전년에 비하여 둔화(1.2%p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회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초회보험료가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전망

보험산업 종합

전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자료: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먼저 보험산업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부채부담 증가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함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산업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및 경쟁 심화에 의한 사업비 지출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보험산업의 주요 동향을 반영하여 수입보험료를 전망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2020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0.0%로,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2.2%로 4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되며, 손해보험 성장률은 2.6%로 전년에 비하여 둔화(1.2%p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회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초회보험료가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2020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2.2%로 4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극적인 판매 전략 등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가 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판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가 전망된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9년 전년 대비 3.7%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18		2019(E)		2020(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생명보험	110.8	-2.7	108.1	-2.5	105.7	-2.2
보장성보험 ²⁾	42.8	2.5	44.3	3.6	45.4	2.4
저축성보험 ³⁾	50.4	-10.8	45.4	-10	41.6	-8.4
퇴직연금	16.9	13.2	17.6	4.1	17.9	1.9
기타 ⁴⁾	0.8	-0.4	0.8	1.1	0.8	0.4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

3)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

4) 일반단체보험을 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

손해보험 성장률은 2.6%로 전년에 비하여 둔화(1.2%p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로 전년 대비 3.4%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할인특약 축소,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은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가 전망된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 3.4%, 2020년 2.5%로 0.9%p 하락할 전망이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18		2019(E)		2020(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손해보험	91.1	3.1	94.5	3.8	97	2.6
장기손해보험	50.6	3	52.7	4.2	54.5	3.4
연금부문	14.3	5.9	14.8	3.5	15.1	2.0
자동차보험	16.7	-0.8	17.1	2.4	17.3	0.9
일반손해보험	9.5	6.3	9.8	3.8	10.1	2.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므로 보험회사는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리한 외형 확대 전략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가치 경영을 실행해야 한다.

과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인구고령화 심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춘 회계제도의 변화로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으로 보험회사는 고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므로 보험회사는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리한 외형 확대 전략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가치 경영을 실행해야 한다.

신성장 모색

-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정성희(연구위원) · 문혜정(연구원) | 보고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자의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비급여 보장구조 개선·계약전환의 정책 지원 검토가 긴요한 시점이다.

연구배경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데,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내용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매우 높다.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 보장구조로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쉽다. 또한, 실손보험은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의 정책적 지원 등의 검토를 제안한다.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 보장구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로 상품 구조를 분리하고,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보장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개선 방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품구조 개선이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제도 개선 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대한 공론화와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이승준(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보고서

인도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다인종 다언어 국가로 지역적으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므로, 인도 시장에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출 형태, 진출 지역과 채널 선택 등에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률과 함께 포화상태에 다다른 우리나라 보험시장도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개책의 하나인 해외 신흥 보험시장 진출은 보험회사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의 확대와 함께 수익구조의 지리적 다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해외 신흥시장 중 인도는 연 7% 대의 빠른 경제성장률과 4% 미만의 낮은 보험침투도, 그리고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주요내용

2014년부터 집권한 현 모디 정부는 경제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비율도 49%로 상향되는 등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외교 관계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상호 우호가 크게 증진되었고, 특히 인도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조직, Invest India 내에 한국 전담 조직인 Korea Plus를 활발히 운영하는 등 한국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다인종 다언어 국가로 지역적으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므로, 인도 시장에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진출 형태 측면에서 우선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하여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보험회사 고유의 강점을 현지에 접목시킬 전략과 합작대상을 찾아야 한다. 진출 지역 측면에서 초기에는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한국 기업 진출 지역의 풍부한 기업성 보험수요를 기초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점차 현지인 대상 보험영업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채널 측면에서 진출 초기에는 기업성 보험 판매에 강점이 있는 직판 및 중개인 채널과 단기적으로 구축이 용이한 방카슈랑스 등을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개인용 보험시장 진출을 위한 개인대리점 등을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송윤아(연구위원)·한성원(연구원) | 보고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 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배경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산업지형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관리 기법의 일환으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조 2,324억 원으로 GDP의 0.82%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다.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증가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대체로 증가하며,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도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유형의 변화와 보장공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강성호(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보고서

요양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보험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 여건의 불일치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독일은 요양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 도입과 민영화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등 간병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배경

고령화 과정에서 질병 및 장수리스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친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적 부문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민영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적 부문의 재원 마련 문제로 추가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민영 부문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민영장기요양보험 상품 개발 및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내용

고령화와 장수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은 재정문제에 직면하여 대응의 어려움이 있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 부문이 요양사업에 진출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고령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합적이고,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며, 여전히 가족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공급 측면 또한 높은 초기 투자비용,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리스크, 국가 정책의 비일관성 등으로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요양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 민영화 강화를 통해 대응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일본은 요양사업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요양사업과 간병보험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간병수요는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간병보험은 보험산업과 긴밀하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 효율성 제고

-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 전략
-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김석영(연구위원) · 이규성(연구원) | 보고서

재보험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보험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보험 출재 축소는 단순 비용절감의 한 방법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정확한 리스크 분석과 함께 최적의 보유한도 등을 산출하여 재보험출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리스크 분석 전문가 및 재보험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보험 실무진과 경영진의 재보험에 대한 인식 공유와 평가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일관된 재보험 전략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최근 보험회사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재보험 비용절감 목적으로 재보험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출재 비용을 축소하고 있으나,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재보험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재보험 전략이 수립·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목적하에서 최적의 재보험 출재율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보험 출재율을 해외 주요 국가의 출재율과 비교하였을 때 출재율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재보험 출재를 손해율 변동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출재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위험선호도 측면에서는 과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목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회사의 전략하에 재보험 출재가 이루어지는 반면,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은 일정한 전략하에 재보험 출재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에게 체계적인 재보험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문가 부족의 문제와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회사는 위험분산과 경영안정성을 목적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때 보험회사의 위험선호도와 자본여력, 재무건전성 규제, 리스크 종류, 재보험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선호도가 결정되었을 때 변동성 기준, 비용 기준, 또는 파산확률 기준에 따라 최적의 보유한도를 산출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 전략

임준환(선임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보고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배분은 주어진 자본규제 제도에 순응하여 LDI 전략원칙에 기반을 두고 실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불리한 금융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시장의 수단 활용을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갑작스러운 규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규제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내부적 위험관리에 보다 힘써야 한다.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채추종형 자산배분(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이하 'LDI'라 함)전략의 관점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현황과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LDI에 토대를 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차대조표모형을 도출한 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자본규제가 보험회사의 최적 보험료 결정과 자산운용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내용

도출된 모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행태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무위험채권 투자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현행 RBC체제하에서 금리하락에 따른 듀레이션 갭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향후 도입될 K-ICS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선행적 조치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만기에 대응하는 국내 채권시장이 미발달되는 경우 듀레이션 갭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화채권 투자액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규모는 국내시장에서의 미헤지 비율규모가 크면 클수록 증가한다. 다만 해외투자 수익률이 국내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사별 자산운용배분의 차이는 보험사업모형의 차이와 위험기피도에 기인한다. 외자계 보험회사는 국내 보험회사에 비해 국채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회사 내부의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관리가 보다 강력하게 실행되는 데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장기 자본시장의 미발달과 해외투자 시 높은 환헤지비용 발생 등이 국내보험회사가 부채추종형 자산운용전략을 실행하는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보험부채의 기대 현금흐름을 추종하기 위한 최적 복제전략(Optimal Replication Strategy)임을 시사하며 이는 국내 보험회사가 주어진 자본규제제도하에서 LDI를 토대로 보험사업모형을 실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정원석(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현재 대부분의 보험판매는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비대면채널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변화와 기술의 발달은 보험판매 채널의 다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보험판매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과거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전속설계사뿐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면서 고객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특히 정보획득에 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밀레니얼 소비자 계층에서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면채널보다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비대면채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소비자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내용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통한 미래채널로의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TM채널의 경우 복잡한 규제로 인해 해외 TM 상품 판매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크며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 및 판매자의 부담 역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입 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통화품질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M의 경우 역시 종이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놓은 수준의 가입절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판매채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의 사후 규제에 대해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칙 중심의 사후 규제 적용은 자발적 상품 가입 및 소비자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송인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보고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보험회계규제가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이익조정을 범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22년 최초의 실질적인 포괄적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17) 보험계약의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 통한 이익조정의 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익조정을 통한 분식회계는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질적인 최초의 포괄적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2022년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 통한 이익조정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회계학 관점에서의 이익조정의 방법과 더불어 보험회사만의 특별한 부채인 지급준비금의 방향, 크기, 그리고 변동성을 통한 이익조정을 소개한다. 또한 다양한 이익조정의 유인을 기술하며 이와 관련된 미래 연구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주요내용

이익조정은 크게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과 실제활동(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으로 나뉘며,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계처리방법을 바꾸어 현금흐름에 추가되는 이익을 조정하고,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기업이 실질적인 자원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들은 이익유연화, 적자보고 회피, 빅 배스, 세금 회피, 지급여력비율 조절, 외부자금조달비용 인하, 외부감사 품질, 경영자 보상, 그리고 신규상장 및 배당 등의 다양한 유인들로 이익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새로운 규제의 도입 및 변화로 재무보고의 질이 투명해지고 비교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시가기준 준비금 부족현상, 보험계약의 수익인식 변화, 당기순이익 급변,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확대, 자본성 확충 등의 현상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 통한 이익조정의 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영진의 스타일, 내부자본시장, 영업주기, 정치적비용, 사회적 책임 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국가별·시대별 차이에 따른 이익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건전성 제고 등 제도 선진화

-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홍지민(가톨릭대학교 교수) |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전매의 허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STOLI와 같은 거래의 차단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 하강으로 인해 생명보험 계약의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계약자의 유동자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시 언제든지 전매거래의 허용에 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매거래 관련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보고, 전매거래의 허용이 계약자, 보험자 및 투자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생명보험 전매거래는 생명보험 계약의 계약자가 제3자인 투자자에게 본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계약자가 해지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서 보험자는 계약자에 대해 수요독점력을 갖게 된다. 이때 전매가 허용되고 전매 가격이 해지환급금에 비해 높다면 계약자는 전매거래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된다. 다만 전매가 소비자 후생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보험자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역시 그 결과가 논쟁적이다. 생명보험 전매거래는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허용되어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도 2년간 시범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시한부 중증질환자에 대해 전매가 허용되었으나 이후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실효되는 계약 중 전매시장에 유입되는 계약은 2018년 기준 약 0.25%에 불과하여 그 시장 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국내의 경우 아직 전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포용적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등의 추세에 따라 전매의 허용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는 다양한 투자자로 하여금 전매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매의 허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STOLI와 같은 거래의 차단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전체 퇴직연금 중 DB형 퇴직연금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DB형 퇴직연금의 수급권보호 장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사외적립수준을 제고하고 적립과 부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며 채권자 우선 변제기간의 연장 및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의 기능 확대 등으로 근로자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수급권보호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보호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차이를 해소하면서 국내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수급권보호제도의 개념 및 기능을 개관하고 수급권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 해외의 수급권보호 사례 및 특징에 기초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선진국의 수급권보호 실태 및 특징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의 수급권보호제도를 비교·평가한 결과, 사외적립률 수준이 저조하고 적기시정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퇴직연금 우선변제기능 미흡 등으로 수급권보호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 제도 보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급권보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사외적립수준이 조기에 완전적립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수준을 적정화하여 사외적립을 적극 유도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사외적립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위해 법인세 감면, 운전자금 대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과거근무채무의 상각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재계산을 매년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부담 정도를 사전에 파악해 이들 기업에는 사외적립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과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형 지배구조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영·미식 지급보증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급권보호가 요구된다.

소비자 신뢰 확보

-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백영화(연구위원) · 박정희(선임연구원) | 보고서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분쟁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암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 및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보험회사로서도 암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민원 처리 시 기존 분쟁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다수의 분쟁을 유발한 약관 조항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암보험 약관 개선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생하였던 주요 분쟁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암보험 약관상 어떤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들이 제기되었는지, 기존 분쟁들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주요내용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 왔는데, 예를 들어, 암보험에서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를 담보하는데 어떤 경우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것인지, 암이 전이 또는 재발된 경우에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전이암 또는 재발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험계약 가입 시점과 암으로 진단 받은 시점에 암의 분류 기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기존의 분쟁사례들을 쟁점별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소비자들은 암보험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기존 분쟁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 또한 기존 분쟁사례들을 숙지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민원 처리 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존에 다수의 분쟁을 유발한 약관 조항을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암보험에 있어서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약관 작성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계의 입장이나 현실에 맞추어 약관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암보험금 해당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자문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분쟁 감소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 보고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많은 특약과 복잡성으로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단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의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보험산업에서 소비자의 신뢰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다양한 제도만큼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으며, 이에 따라 보험의 순기능 역시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도의 설계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신뢰수준의 향상 방안을 마케팅 요소인 상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상품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많은 특약과 복잡성으로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단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수수료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방카슈랑스 도입 후 2014년, 2015년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감소된 경험, 미국, 독일에서의 수수료 규제, 특히 최근 호주에서 이해상충보수의 금지 등을 볼 때 감독당국의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감독당국의 수수료 규제는 뉴욕주의 사례처럼 상한을 정하고, 호주의 경우처럼 시책, 비금전적 급부의 금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양승현(연구위원)·손민숙(연구원) | 보고서

금융통합법률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입법은 규제공백 없는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필요성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동일 기능·동일 규제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권역의 상품과 영업행위의 특성에 맞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상품·위험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관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금융통합법률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은 규제공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의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전 권역을 아우르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통합법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본 보고서는 주요 쟁점별로 해외 사례를 조사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험권역의 상품 및 영업행위 특성에 입각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판매인의 수당고지 의무는 소비자에게 판매인의 경제적 유인을 알려 권유의 편향성을 경계토록 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보험중개사와 달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 또한, 보험상품은 수수료 체계의 특성상 이해 가능한 형태의 고지가 어렵고, 소비자의 주된 관심사항(보장내용 및 보험료)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이고,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행위를 하는 자로서 겸영은 그 자체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한다.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 겸영 금지 내지 판매수당 수취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상품(장래 수익을 위한 위험감수)을 전제로 마련된 협의의 적합성 원칙(권유금지)을 보험상품(장래 위험회피를 위한 위험이전)에 널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판매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환기하여 대비토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획일적 규제 적용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의 권유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과소보장의 우려 및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피해보상에 대한 기반 여건 조성 마련
-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주요국 동향(2019)
- 자동차사고 대물피해책임 해외사례 연구
- 미술 관련 보험제도 개선연구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정성희(연구위원) · 김규동(연구위원) · 채원영(연구위원) · 문혜정(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병사가 군 의무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군·민간 병원 구분 없이 국가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가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배경

병사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에 따라 병사의 치료비 부담이 상이하는 등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재해 보상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은 국방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병사의 실손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를 포함한 군 단체보험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군 의료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책 마련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개인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 및 의료 선택권 행사 권리의식 제고에 따라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본인 희망으로 민간 병원 이용 시 자비로 부담하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군 의료기관은 자원배분의 비효율, 의료 시설 노후화,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함에 따라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선호 현상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병사가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해주고 있는데, 현역병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2020년 기준 37만 명)으로 하는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가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필요가 있다. 현역병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9,000~9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에 따른 정량효과는 2020년 기준 연간 77억 원 정도 예상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피해보상에 대한 기반 여건 조성 마련

황현아(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보고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료 기기 중에서도 환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결함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신속·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을 통해 업체 부담 시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환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 및 부작용 사고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물책임법과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이에,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 피해구제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의료기기 사고 관련 피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구제, 책임의 공정한 배분,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혁신과의 균형성, 국제적 정합성, 규제법과 책임법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및 의약품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등을 조사해본 결과, 의료기기 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 모델로는 (i) 독일 의약품 판매법 모델, (ii) 한국 의료분쟁조정법 모델, (iii) 한국 약사법 모델, (iv) EU 의료기기규정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i) 제조물책임법 특칙 도입 방안, (ii)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 (iii) 의료기기사고 전문 분쟁해결기구 도입 방안, (iv) 무과실 피해구제제도 도입 방안이 가능하다.

이 중 제조물책임법 특칙 도입 방안은 국제적 정합성이나 의료사고·의약품 사고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채택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3가지 방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하며, 그 피해구제금은 보험을 통해 지급하고, 보상 사각지대 발생 시 제한적 범위에서 피해구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피해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주요국 동향(2019)

황현아(연구위원)·기승도(수석연구원)·한성원(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보고서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는 아직 형성 과정에 있다. 주요국에서도 완성된 형태의 제도를 확정하기보다, 향후 지속적인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동태적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는 아직 형성 과정에 있다. 주요국에서도 완성된 형태의 제도를 확정하기보다, 향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주요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및 보험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동향은 크게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동차사고에 대해 엄격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자동차사고 배상책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법제하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그 자율주행차를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동차 보유자가 된다. 그 결과,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배상책임법제를 당장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고, 보험제도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독일, 일본, 프랑스의 경우 기존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법령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반면,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운전자” 중심의 배상책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실 있는 운전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 체계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 시 “과실 있는 운전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책임 공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영국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회사에 법정책임을 부과하였고, 미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의 안전기준 마련을 서두름으로써 제작사 책임과 운전자 책임의 경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호주는 현행 자동차의무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제도를 정비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사고 대물피해책임 해외사례 연구

황현아(연구위원) ·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한성원(연구위원) · 문혜정(연구위원) | 보고서

자배법은 대물사고에 대해 운
행자책임은 적용하지 않고 의
무보험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대물사고 발생 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이 성립되지 않거나 보험약관
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해
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구제 공백이 필요하고 타
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대물
피해책임 관련 주요국의 사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엄격책임인 운행자 책임을 적용하고 있어,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의무보험제도는 대인 및 대물에 대해 모두 도입하고 있다. 그 결과, 대물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보상 공백의 해소가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자동차사고 대물피해책임 관련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운행자 책임을 대물배상에도 적용할 경우 그 영향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대물사고는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아닌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인사고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이나 보장의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못지 않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동차사고에 대해 엄격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독일과 프랑스는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에 대해 동일하게 엄격책임을 도입하고 있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사고는 물론 대물사고에 대해서도 준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유자, 소유자,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적용되는 보상 한도가 다르고, 프랑스의 경우 대물사고에 대해서 보다 책임을 완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책임성립 근거 자체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엄격책임을 도입하고, 의무보험도 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대물사고에 대해서도 엄격책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는 보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보험료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술 관련 보험제도 개선연구

최창희(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홍민지(연구원) | 보고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미술 관련 보험에 시장실패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미술품 소유자 및 가격에 대한 불투명성, 미술품 손해사정 기준의 부재, 미술품 운송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 모호한 미술품 유통업자의 법적 책임, 미술품 전시 관련 국가보상제도의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품 유통 및 전시 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생활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이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예술로서 미술, 음악, 문학, 공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미술품 유통 시장이 연간 5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미술품의 유통 및 전시 GDP 대비 미술품 유통시장 비중이 0.1373%이고 중국도 0.1102%이다. 국가별 GDP 대비 미술품 유통시장 비중은 각각 영국 0.4830%, 프랑스 0.1724%, 독일 0.0345% 등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미술품 유통시장 비중은 0.0269%로 주요국 평균 0.1338%의 1/5 수준이다. 또한, 세계 미술품 유통 사업자들(화랑 및 경매회사)이 매출의 약 1.1774%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화랑과 경매회사의 미술품 유통시장 규모 대비 보험료 지출 비중은 약 0.5271%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미술 관련 보험의 시장실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해외 보험시장을 조사한 결과 미술 관련 보험에 박물관·미술관종합보험, 화랑종합보험, 경매장종합보험, 미술품 감정사 배상책임보험, 아트페어보험, 전시회보험, 미술품 운송보험, 미술품 적하보험, 미술품 권원보험, 미술가(美術家)보험, 미술품소장가보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화랑종합보험, 감정사 배상책임보험, 아트페어보험의 미술품 담보, 일부 전시회보험, 일부 미술품 운송 및 적하보험, 미술품소장가보험 등에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미술품 소유자 및 가격에 대한 불투명성, 미술품 손해사정 기준의 부재, 미술품 운송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 모호한 미술품 유통업자의 법적 책임, 미술품 전시 관련 국가보상제도의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품 유통 및 전시 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 이슈 연구

- CEO Report(제2019-1호~제2019-4호)
- CEO Brief(제2019-1호~제2019-11호)
- KIRI 리포트 포커스(제461호~제484호)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제461호~제484호)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제29호~제34호)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제29호~제34호)
- KIRI 보험법리뷰 포커스(제1호)
-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제1호~제2호)
- KIRI 보험법리뷰 특별기고(제1호)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이승준(연구위원) | CEO Report

제2019-1호

장기간의 기후 패턴 변화로 정의되는 기후변화는 산업화 같은 인류의 활동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심화되는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과학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된 관심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사회경제적 대응 방안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관리 전문산업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은 크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물리적 위험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전환적 위험으로 대별되며, 이는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보험, 시장, 운영 위험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위험의 여러 요소를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실무 사업부서의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친환경 보험상품 개발과 친환경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한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환경 관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제시한다.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 CEO Report

제2019-2호

세계 경기둔화와 투자 및 수출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하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주요 기관들이 기존에 예측했던 2.2~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시장금리 하락세와 환율 상승세는 2019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주가는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종신보험 시장 정체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 등으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신규판매 둔화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의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김동겸(수석연구원)·정인영(연구원) | CEO Report

제2019-3호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연금상품 판매 급감, 실손의료보험 손해를 악화 등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범죄의식 등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괴된 보험생태계의 재건을 위해서는 우선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치 이행을 통해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업무인 보험영업을 통한 수익 확보에 초점을 둔 사업모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연금 세제혜택,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판매자책임법제 재정립 등 판매채널제도를 정비하고,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현황 및 분석

김규동(연구위원) | CEO Report

제2019-4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으로 최근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해지율차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회계제도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하지만, IFRS 17 및 K-ICS 도입 시에는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황인창(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1호

2019년 6월 27일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 및 보험회사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과기간 설정, 필요 시 시행 초기 RBC와 K-ICS의 병행 등 K-ICS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로 K-ICS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본규제 선진화와 더불어 보험상품의 구조 변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과는 별개로 위험관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더욱 강화하여 금리 위험에 취약한 사업모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파괴의 시대 보험회사 경영진의 고민, 혁신

송윤아(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2호

사이버위험과 더불어 혁신이 세계 보험회사 경영진의 최대 고민거리가 된 가운데, 보험전문 신용평가사 A. M. Best는 지난 3월 신용평가에 혁신수준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A. M. Best는 리더십, 조직문화, 자원, 프로세스 및 구조, 성과, 그리고 변화수준 등 6개 항목으로 혁신수준을 평가한다. A. M. Best의 혁신수준 평가는 보험회사의 효율성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성공적인 혁신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혁신 경쟁력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주문한다.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사업전략과 일치하는 혁신전략의 수립과 전통적인 보험생태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활동으로 혁신주도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2019년 보험료 수정 전망

조영현(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3호

경기부진 심화로 소비자의 보험가입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하락세로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인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2019년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을 기존 전망(-0.8%)과 유사한 수준인 -0.7%로 전망한다.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 둔화와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 부진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김동겸(수석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4호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험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험사가 만연함에 따라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괴된 보험생태계 재건을 위해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치를 통한 보험사업모형 다각화,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및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및 신뢰회복을 위한 판매자책임법제 재검립 등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

정성희(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5호

최근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를 상승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속성의 위협 요인으로서는 정보 비대칭성 노출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는 점,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으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손 가입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저금리 환경의 영향과 과제

조영현(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6호

최근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인하여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인구고령화에 의한 잠재성장을 저하와 맞물려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될 수 있다. 초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실행해야 하며, 사업모형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성 및 수익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7호

2000년 이후, 손해를 급등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3년 내지 4년 주기로 반복되었다. 금융당국의 요율 및 상품자유화 정책, 자동차보험은 필수재(의무가입 보험)라는 국민의 인식이 상호 작용하면서 '감독원 주도' 및 '범정부 주도'에서 '업계 주도(최근)'로 제도 개선 주체가 변화되었다. 다시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 2019년 현재, 요율 및 상품자유화라는 명분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업계주도의 선제적 제도 개선 발굴 및 제안과 자구노력 선언 후 금융당국 참여 유도, 요율조정 등을 통한 손해를 안정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방안 발표와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19. 10. 10)를 통해 최근 금리하락을 고려한 LAT 개선 방안과 함께 IFRS 17 대비를 위한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제도 개선안은 2019년 말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LAT 개선 방안은 IFRS 17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산업의 안정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 금리하락에 따른 보완책과 부채관리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계약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강성호(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9호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 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켜 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산학보험연구센터 | CEO Brief

제2019-10호

본 보고서는 산학보험연구센터 오픈 기념세미나에서 논의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시각을 보험회사의 경영진들과 공유하고자 작성되었다. 학계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보험회사는 상품 설계 시부터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민원 관련 적절한 통계의 집적과 정밀한 분석 필요/소비자 책임도 강조할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계는 업계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필요/법과 상식으로 민원 해결/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서 건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로 나아갈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핀테크 규제개선과 시사점

김규동(연구위원) | CEO Brief

제2019-11호

금융당국은 핀테크·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산업에서는 더 많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해외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작업을 시작하였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금융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보험과 P2P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며,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김세중(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1호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노후보장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이하, 'NAIC'라 함)는 이에 대비하여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논의 중이다. NAIC는 장수위험 테스트 포스를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장수위험 요구자본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망률의 개선정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완만한 수준이고, 사망률의 변동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 개발로 장수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준비 중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계적인 영향분석을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 지급여력제도와 자본관리 다변화

임준환(선임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1호

2022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 수단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보험회사는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자본관리에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향후 K-ICS 도입 대비 선제조치가 시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내부 이익잉여금 창출, 금리변화에 대한 채권재분류, 장기 국채 매입,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은 충분한 여유자본을 갖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여유자본이 희소한 경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다 선진화된 자본관리(재보험의 활용,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 파생금융상품 활용을 통한 요구자본의 경감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용자본을 확충함과 동시에 요구자본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2호

은행 등 비보험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으로 투자·인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금융당국은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은행법과 달리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러한 입법은 은행 등 타 권역이나 일본 등 해외입법례에 비교해보더라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보험소비자 편의 제고,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 정비와 필요한 바, 핀테크 기업 외에도 건강관리서비스 등 널리 수요를 조사하여 개정 범위를 검토하고, 은행법이나 일본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변혜원(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2호

국내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화·고도화 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하는 유형의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기 방지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보험사고 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의 제한, 경찰 내 전담인력 부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고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개선, 보험사기 수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적극적인 보험사기 인식 제고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유자료 집적단계에서의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적인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3호

미국, 영국, 유럽연합에서는 금융상품 중개인과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이로 인한 잠재적인 소비자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개인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 문제는 금융업에서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 이후 상품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수체계에 대한 의무적인 공개는 중개인이 전달하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강화는 불완전 판매 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3호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재보험담보폐지와 관련한 재보험모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 물건 수재 시에 100%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본 보험회사는 2015년부터 인정관할국가로 평가받아 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보험업계는 현재 개정 중인 재보험모델법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험업계의 파급효과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국내 보험업계는 보유보험료 확대를 통한 보험산업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NAIC에 제시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FTA의 재보험조항이 상호관할국가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인정관할국가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 자료 구비 등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담보 완화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 내 우량 물건의 보유 확대를 통한 재보험수지 역조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

임준(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4호

사이버보험 공급 측면의 평가 제약과 자본력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 풀이 거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 풀 사례를 살펴보고,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이버보험 풀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보험 풀은 그동안 상호협정 제도에 의해 운용되어 왔는데, 모두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이며, 아직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영국의 연구기관인 Long Finance는 테러위험 풀인 Pool Re와 홍수보험 풀인 Flood Re 사례를 참고하여 재보험 단계의 사이버보험 풀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이버보험 풀 구축과 관련하여 원보험 단계의 풀과 재보험 단계의 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 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 목적물이 많아질수록 원보험 단계에서의 상품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김석영(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4호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이 활성화되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계약자 행동리스크로 인해 해지율 예측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 시장에서 무해지 환급 상품이 성장하였으나 해지율 예측이 틀림으로써 손실을 경험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도 해지율 예측의 어려움과 캐나다의 실패사례를 고려하여 개발을 포기하였다. 해지위험은 보험회사가 가지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위험요인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주요 제도에서도 해지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보험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무해지·저해지 상품과 관련한 경험이 없으니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5호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변경안에서는 추나요법을 세분하여 상대가치 점수를 219.46~568.05점으로 정하고,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50~80%로 정하였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47.1~280.8%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용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6호

2005~2017년 기간 동안 60세 미만 교통사고 부상자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4%씩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가 연평균 5.6%씩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의 18%(2005년 기준 9%)를 차지한다.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 7,699억 원으로, 60세 이상 고령 환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6,274억 원으로 전체의 29.5%(2016년 28.3%)를 차지한다. 더욱이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타 연령대에 비해 1.6배 높으며 증가세에 있다.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110만 원, 20대 160만 원, 30대 166만 원, 40대 173만 원, 50대 202만 원, 60대 231만 원, 70대 370만 원, 80대 이상 495만 원이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도 고령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고령화에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교통사고 환자의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사고 환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6호

2019년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카풀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되었다. 이 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카풀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 관련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운송네트워크회사(TNC) 및 TNC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고, 관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금리 딜레마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7호

최근 저금리가 보험회사의 국채투자를 촉진하고, 국채투자 증가는 다시 금리를 하락시키는 “금리의 정(+)의 피드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 처하게 된 배경으로는 보험권의 자생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채권투자 비중이 다른 기관투자자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현재 금융여건하에서 금리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해외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의 방안은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택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자는 보험회사의 국채투자 증가가 국채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연착륙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8호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나,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개별 법령상 특별한 억지가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이 도입되고 있다. 입법사례는 (i) 담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ii) 근로관계상 차별처우, (iii)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중대한 위해유발 등 통상적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려운 영역에 한하며,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악성(고의·중과실 등)을 요한다. 2019년 3월 의원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5배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입법사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보험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등 문제소지가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도입에 앞서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의 부존재 등 예외 적용 정당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전용식(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9호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수는 82개로 지난해보다 4개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0년 이후 8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였다. 해외사업 성과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보험회사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의 자산규모는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추세에 있으나 수익 증가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은 해외사업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해외사업 유인 약화로 현지법인 설립보다는 현지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지분투자,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시 업무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 금융포용 동향과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9호

금융포용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금융포용을 통해 가계는 소비를 평탄화하고 저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사고의 재무적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다. 우리정부도 포용적 금융을 주요 금융혁신 과제로 삼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여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금융포용 정책을 위해서는 첫째, 금융소외 집단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핀테크는 금융포용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고령층의 디지털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행된 금융포용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며, 새롭게 계획하는 정책은 실행 이전에 충분한 소비자 분석과 사전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중·고령층 보험·금융소비자의 정보격차 실태와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0호

디지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3% 수준에 불과하며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디지털정보 활용 측면에서 고령층은 사회적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낮지 않으나, 금융상품 구매 등 금융행위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중·고령층은 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 의존도가 높아 인터넷 채널의 저렴한 수수료 혜택을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고령자는 디지털 접근성에서는 격차가 크지 않으나 역량과 활용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여기에 방점을 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핀테크 공급자는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설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령자 전용 버전의 앱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0호

2016년 6월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범퍼에 대해 제정되었고 2019년 5월에는 차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지급된 대인배상 금액과 민원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충격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충격으로 인체에 미치는 손상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높아질수록(충격이 클수록) 대물 및 대인배상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충격의 크기가 유사한 사고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사고에서 나타난 대인 및 대물배상 금액의 높은 변동성은 형평성 훼손 및 보상심리 확대 등으로 민원과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계약자들의 분쟁 확대, 자동차보험의 신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상(보상) 금액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1호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가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보험산업 연금부문의 축소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의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공급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보험은 IFRS 17하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금리위험과 장수위험 부담이 크다. 또한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전략적 리스크 관리, 투자형 상품의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분산,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통해 연금보험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상품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및 향후 과제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1호

2019년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액도 증액되었다. 표준약관은 차량 연식·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하되 차량 연식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시세하락손해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 후에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수리비·시가 차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수리비 산정에 관한 일률적 기준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다수 보험계약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법원의 판결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의 공평·타당한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양자의 판단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통상적·전형적인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반복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차이를 줄여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송윤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3호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달원의 근로형태와 함께 법적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지고 있다.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배상자력 및 피해복구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 가해자 및 사상자의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아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3%,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 II 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 10%에 불과하다.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배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배달원의 보장공백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여행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정성희(연구위원)·홍민지(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3호

우리나라 여행보험시장은 2017년 기준 1,262억 원으로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세로, 특히 해외여행보험시장은 2017년 1,090억 원(전체 여행보험 중 86%)으로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사고 유형은 해외의료비(53.0%)와 휴대품분실(38.7%)이 높으며, 해외여행상품에 부가 제공되는 결합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소비자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질병의료비는 20세 이하에, 휴대품분실은 20~30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합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보장이 미흡하고, 보험회사·보장범위·보장금액 등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여행보험시장은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절차 간소화, 모바일 앱·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특징으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만 적용되는 여행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한 상품이 출시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여행보험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여행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에 반영될 보험회사의 혁신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4호

지난 3월 보험전문 신용평가사 A. M. Best는 신용평가에 혁신요소를 명시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M. Best는 혁신을 조직이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향상된 상품·프로세스·서비스·사업모델로 구현하고, 지속적이고 측정가능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다단계 절차로 정의하였다. A. M. Best의 혁신점수는 리더십, 조직문화, 자원, 프로세스 및 구조, 성과, 그리고 변화수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여 합산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①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 ② 혁신에 따른 위험과 실패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외부 솔루션에 개방적인 조직문화, ③ 혁신에 적합한 자원 확보와 자원의 효과적 운영·관리, ④ 기업의 장기 전략목표에 부합한 혁신전략 프로세스·구조, 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유형의 성과 취득, ⑥ 혁신을 통해 보험산업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선두주자들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변화수준 등을 높이 평가한다.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전략과 일치하는 혁신전략의 수립과 전통적인 보험생태계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활동이 필요하다.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오승연(연구위원)·이규성(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6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 보험계약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 및 정신적 노화로 인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외출이 곤란하여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대체할 수단을 제공하고,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할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 시 청구서류 대필을 인정하고 있다.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고령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청구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판매채널의 정기적 방문 및 대리청구허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7호

최근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산업의 자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금리리스크(듀레이션 갭)가 더욱 확대된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으로 판매유인이 더욱 감소할 것이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에 의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 확대,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보험산업은 2000년대부터 저축성보험을 금리연동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등 금리 하락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금리 하락 속도로 인해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악화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및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지구적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 및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환헤지 비용의 특성

임준환(선임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7호

최근 환헤지 비용 확대가 보험회사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환헤지 비용 추정 결과, 2018년 말 기준으로 환헤지 만기가 짧을수록 환헤지 비용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기 3개월 통화선도환 롤오버전략을 2018년 말 기준으로 1년 동안 적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된 환헤지 비용은 약 1조 8,000억 원으로, 만기 1년 통화스왑의 환헤지 비용은 약 2조 1,100억 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이에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환헤지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첫째, 해외투자 시 투자수익 목표 및 수단, 목표 환헤지 비율 및 환헤지 수단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환헤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목표 환헤지 비율은 환율, 양국 간 금리차이 등 거시금융 여건에 대한 전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통화를 다변화하는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투자의 목표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다.

K-ICS 2.0 주요 내용과 과제

노건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8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이 7월에 발표되고, 이와 동시에 2차 계량영향평가(QIS 2)가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K-ICS 2.0은 K-ICS 1.0에 비해 평가방법이 완화되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금리 지속에 따라 K-ICS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과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책임준비금 및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일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요구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경과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파생상품, 재보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회사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8호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IAS가 개발 중인 ICS에 대응하여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일본은 ICS를 모범으로 한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일본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외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감독 및 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필드테스트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정밀한 기여도 분석, 자국 특성을 반영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산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최근 설립된 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제도 설계 및 도입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유지와 함께 위험보장 및 장기자본 공급 등 보험회사의 사회경제적 역할,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김동겸(수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78호

2018년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각각 13.6%, 24.9%로, 2016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매출액(수입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보험료 감소율이 사업비 감소율보다 더 크기 때문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매출액(원수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 중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율 증가 현상은 판매채널의 변화와 관련이 높다. 최근 3년 사이 대리점채널을 통해 지출한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 증가율은 18.8% 이른다. 이는 시장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비율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회사도 이에 편승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80호

정부는 가입단계(ISA의 연금계좌 전환,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서 추가적 세액공제를, 수급단계(퇴직금의 연금화 유도)에서 퇴직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연금세제 개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금세제 개편은 추가 세액공제 및 퇴직소득세 감면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상 기대 수준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ISA계좌의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40만 원(현행 대비 75.5% 증가)이나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6만 원(현행 대비 16.2% 증가)으로 추정되었고,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26만 원(현행 대비 49.1% 증가)이나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13만 원(현행 대비 29.5% 증가)으로 추정되었다. 이렇듯 세제혜택에 있어서 제도상 최고 허용치와 현실의 세제혜택 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개정안은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험계약이전 규제완화 사례와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80호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계약 일부 종목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임의적 계약이전 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목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3년 이와 같은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 배경에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로 인해 경쟁력 강화 및 사업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목적으로 한 사전적 구조조정에 제약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 폐지로 동일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집채널이 다른 계약들을 일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영전략으로 일부 보험종목 이전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이전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계약의 이전단위를 결정하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동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임의적 계약이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보험금 청구권 확보, 서비스 및 배당수준 확보 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80호

최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국가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 및 의료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역병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국방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2020년 기준 37만 명)으로 하는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가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역병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9,000~9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의 유사성 및 사각지대 문제

이태열(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83호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도입 초기 퇴직급여에 대한 통산기능 및 지급계좌 역할을 하는 개인 퇴직계좌(IRA)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개인연금과의 유사성이 커졌다. 가입 대상에 있어서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수령자와 기업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개편과정에서 추가된 세제혜택도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우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은 급성장한 반면, 개인연금시장은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지극히 낮게 나오는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를 해소할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상호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84호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 이러한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와 재산피해는 2017년 291명, 570억 원으로 매년 28%, 23%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은 소방사업자의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주별 소방산업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형태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자 손해배상책임 여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 전국소방협회 등 단체를 통한 자율 규제 방식의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사고의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1호

현재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법에 의해 규정되기 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보유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점차 데이터 집적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하면서 법률상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형재산 관련 소유권이나 저작권의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소유권 제도를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1호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고채 만기별 수익률 수준을 보여주는 국채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졌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에 의한 것이다. 장기금리는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설령 추가 인상되더라도 장기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금리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는 저금리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자산다변화를 확대하고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에 대응하여 수익성이 높은 해외자산의 다각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주요국의 전망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2호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KPMG(2015, 2016)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사고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2040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2013년 대비 40%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독일 보험협회(GDV 2017)는 자동차보험 손해액 감소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전망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개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점진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2호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증가세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실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미사고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진료일수 장기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U 보험상품 판매지침(IDD) 시행과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3호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EU의 보험상품 판매지침(IDD)은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제반 활동이 고객 이익에 부합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판매인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자문수수료(Fee)의 경우 유형·원천·금액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Commission)에 대해서는 유형·원천까지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의 IDD 시행에 따라 향후 유럽 보험회사들은 보다 소비자 중심의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 원인 분석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3호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출의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들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비중이 높아진 배경은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고 연체율도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대폭 확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개편의 내용 및 기대효과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4호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2019년 7월부터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소속별 등록기간,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가 동의한 경우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설계사에게도 자발적으로 건전한 모집 및 계약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추진 경과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4호

규제 특례를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4월 1일)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동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그간 규제에 의해 답보상태에 있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지속적 정책 추진과 더불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4호

기술발전과 소비자계층의 변화에 따라 보험판매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채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래에는 이들 채널이 주요 판매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채널 활용은 소비자가 합리적 가격에 편의성 높은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자는 대면채널 대비 비용효율적인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대면채널의 소비자 보호 효과는 유지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전용식(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5호

지난 2월 21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반영되는 출발점으로,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 보험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정책은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상실수익 지급 기준인 일용노임을 상승시켜 보험금 증가폭을 확대시키고, 고령 운전자 증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도 보험금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금 증가세 확대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보험산업의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5호

한반도에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인체의 호흡기와 순환계에 침투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사망률을 높이며 전자산업 등 제조업의 불량률을 높이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의 건강과 기업의 활동에 주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변화는 위험관리에 특화된 보험회사에 도전이면서 기회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변화와 시사점

김석영(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6호

보험상품 종류에 따른 신계약 건수는 종신보험이 가장 많고 암보험, 연금보험이 그 뒤를 이었지만, 소비자의 관심도를 보험상품별 검색 빈도로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암보험, 종신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실적과 관심도 간의 차이는 판매채널의 역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6호

중소기업은 사이버 위험관리 역량 측면에서 대기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 시 대기업과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산업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홍보 책자를 배포한다. 둘째, 보험회사는 단순히 사이버보험만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위험관리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보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렉테크(RegTech) 현황과 전망

변해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6호

금융규제 강화, 정보기술의 발전,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시장에서 규제 및 준법의무 준수에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렉테크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감독당국은 쉐테크(SupTech)를 이용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상세한 금융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금융회사 감독에 텍스트 분석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렉테크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향후 전망

전용식(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7호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였으나 3월 20일에 기준금리를 2.25~2.50%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 기조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대한 불안감 확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미국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정책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는 국고채 금리 하락 등 국내 경제 성장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내용과 과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8호

정부는 2018년 7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11월 위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본인 정보의 일괄 수집·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EU GDPR에서 새롭게 도입한 정보이동권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면 정보관리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의 정보 처리 및 이동 관련 비용 부담 문제 및 금융플랫폼 구축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 체계의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9호

우리나라 노인 치매유병률은 2018년 10.2%로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사회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증치매로 보장 확대한 치매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치매 보장에 대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발맞춰 보험업계에서는 치매보험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채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모형위험관리

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0호

향후 국내 보험산업은 부채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보험회사의 복잡한 정량모형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모형을 부정확하거나 부적합하게 사용하면 상당한 재무적 손실과 평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모형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이에 보험회사는 모형 지배구조 확립, 모형 검증 강화,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통한 결과해석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모형위험관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위험관리 지배구조 및 체계 등 절차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의 기대효과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1호

최근 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은 교통환경 및 국내 법규 변화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기준으로 평가된다. 개선안에는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방과실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과실비율 산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괴리가 해소되고,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2호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16년 4/4분기 이후 10분기 동안 사실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4/4분기 이후에는 실질 가계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사회보장비용, 이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내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의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기뿐만 아니라 가계의 강제적인 부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속설계사 소득분포의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2호

보험회사 설계사 소득분포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50만 원 미만) 설계사와 고소득(500만 원 이상) 설계사 간에 인원은 큰 차이가 없으나 생산성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속설계사를 둘러싼 보험판매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생산성이 낮은 설계사들부터 불가피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판매환경의 부정적 변화가 전속설계사 조직에 미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온과 고령자 사망의 관계

최창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2호

통계청이 제공하는 과거 21년간의 사망원인 통계(사망 전수자료 536만 건)와 동기간 기상청 과거기상자료를 토대로 일평균 기온별 평균 사망자 수(ADT)를 조사한 결과, ADT는 일평균기온이 26℃일 때 654명으로 가장 적었고, 겨울철과 여름철에 각각 최대 754명(15% 증가)과 757명(16%)까지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과 70세 이상 여성의 사망자 수가 기온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행태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3호

2016년 하반기와 2019년 5월 대형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한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초경미사고(차량 수리비 50만 원 미만 사고) 환자들이 과도한 치료와 대인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진료기간이 긴 편이고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 진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초경미사고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위험요인 진단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4호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연금,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령화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경우 유병률 고령자 가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갱신 보험료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리스크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종신형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정도가 미미하고, 자동차보험 및 기업형 일반손해보험은 고령화 리스크를 상당부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회사는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상쇄되거나 희석시킬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보험소비자불만 개선을 위한 제언

변혜원(연구위원)·이규성(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4호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불완전판매 예방과 민원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보험회사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판매자 성과지급체계를 수정하고, 판매자를 위한 상품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화 보험회사 간의 자율민원조정을 활성화하고, 회사 내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또는 확대하여 자율적인 민원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원인분석 - 물적담보를 중심으로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4호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7.7%로 예정손해율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전년 동기 82.6% 대비 약 5.1%p 급증한 것이다. 최근 손해율 급등은 주로 보험금원가인 1사고당손해액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보험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손해율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활 필수재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금 누수요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의 최소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5호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장의 확대뿐 아니라 비급여의료비와 같은 보장 외 부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실손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손해액 증가 현상에 유의하고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공·사 보험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보험 가입

최장훈(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5호

핵심적인 경제인구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Milenials)는 이전 세대에 비해 실손의료 보험과 어린이 보험 이외의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가입률이 낮지만 가입의향은 높아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자산축적과 노후소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현재 가입률은 낮지만 가입의향이 높은 저축성보험 공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에 부합하는 저축성보험(예: 유니버설 보험)을 온라인으로 마케팅 및 판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화보험 판매 동향과 과제 - 일본 사례의 시사점

정인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6호

최근 안전자산 선호 증대, 원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앞서 일본의 경우에도 초저금리, 원화 약세에 따라 외화보험사장이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고령계약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본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상품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고령자 계약 시 친족 동석, 판매수수료체계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화보험은 세제혜택, 고수의 가능성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판매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관련 해외 보험감독 동향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6호

향후 세계 보험업계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물리적, 전환, 배상책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러 나라 보험감독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현황 조사, 저탄소경제 전환 영향 평가, 공시제도 개선, 재무건전성 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업계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감독자는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해외 보험감독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규제 연구와 시사점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7호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규제 연구에 의하면, 요율규제는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늘린다는 부분적인 긍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과 손해를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자 보험료 할인특약 할인폭 축소 등 보험사고 감소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격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채적정성평가(LAT)부담 증가와 과제

노건엽(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9호

생명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2017년 말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LAT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 하락 시 잉여금 비율이 낮은 회사는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신계약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 등 상품의 금리리스크를 줄여야 하며, 보유계약의 경우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Buy-back)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글로벌 정책대응 동향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79호

2015년 195개국이 체결한 파리 협정을 계기로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금융산업을 통해 관리하는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도 파리협정의 녹색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NGFS가 결성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동향은 향후 투자관련 위험과 이를 반영하는 보험감독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속적 소비자물가 하락 경험과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80호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9월 소비자물가가 최초로 하락하였으나, 지역별로는 2015년 충북(9개월 연속), 2019년 울산(8개월 연속) 등 다수의 물가 하락 경험 있다. 충북의 경우 유가 하락이라는 공급 요인이 주도했고 2016년 들어 물가가 상승세로 반등하였다. 2019년 울산의 경우는 집세와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타지역 대비 심각한 저물가가 나타나면서 물가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저물가 기조는 농산물에서의 기저효과가 해소되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집세와 개인서비스 항목의 저물가 기조가 심화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연금보험 판매채널 현황과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81호

2014년 이후 개인연금보험 판매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판매 수수료 제도 변화에 따른 판매유인 감소도 감소원인 중 하나이므로 판매채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카슈랑스는 저축성보험의 주 판매채널이며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보험 판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개인연금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측면에서 온라인 채널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조영현(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81호

벨기에 금융당국은 최저보증이율의 최고 한도 설정, 금리위험에 대한 준비금 추가적립제도, 지급여력제도에서의 보수적 경과조치 운영 등으로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벨기에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하락에 대응하여 신계약, 보유계약, 자산운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꾀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신계약의 보증리스크 축소 및 고금리 보유계약의 환매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지원하고 산업의 변화를 모니터링 및 감독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미국 반려동물보험 감독 가이드라인 도입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82호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이하, 'NAIC')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감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NAIC는 반려동물보험 모델법을 작성 중이며, 면책사항 고지, 청약철회 제도,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법을 참고하였다. 미국의 반려동물보험 관련한 감독 동향을 참고하여 반려동물보험의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데이터의 집적 문제, 소비자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82호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은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가 매우 높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Gig 경제(Gig Economy)의 확산으로 인해 시간제 배달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 이에,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적 방안, P2P 보험 및 '시간제 이륜차보험' 운영 등 인슈어테크 측면의 노력은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와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83호

2016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여 2019년 상반기 -427억 원을 기록하였다.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한 것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11개이며, 이들은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은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중 4개 회사는 2019년 상반기에 책임준비금이 감소했다.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자산도 감소하므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생명보험회사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생명보험의 인터넷채널 현황

정인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84호

일본의 인터넷전문생명보험회사는 건강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선택적 보장, 인수기준 완화 등의 특징을 가진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의향은 크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성장성도 정체된 상태이다. 인터넷채널을 통한 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불안감이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와 함의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9호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 DWP(Department for Work & Pension)는 2015년 4월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0.75%(적립금 대비)로 설정하고, 계약형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금지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호주는 2009년 Cooper Review 연금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 수수료가 저렴한 새로운 형태의 단순화된 디폴트옵션을 제안한 바 있다.

선진국 사례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개선 방향은 ① 수수료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② 취약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강화하고, ③ 디폴트펀드 등 수익률과 수수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인구 이동권 확보 방안

김규동(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30호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는 중상자 수·사망자 수 비율이 타사고에 비해 높아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할 경우,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고령자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州)에서는 고령자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운전자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 이동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고령인구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공유승차제도를 통해 고령자 이동권을 향상시키는 지역도 있다. 국내에서도 운전 여부에 따라 고령자 이동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아날로그방식 택시 호출 서비스, 공유승차제도, 읍면 단위 카풀 서비스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를 위해서는 운행 범위 제한 운전면허 제도나 고령운전자 차량에 대한 식별 표식 사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보험수리적 비교 분석

김규동(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31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으로 이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는데, 노령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활동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거나 지급을 연기하는 조기노령연금 및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행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62세이며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연금개시 시점 조정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노령연금을 조기에 개시할 경우 지급률이 1년에 6%p씩 감소하여 5년 조기 수령 시 지급률이 70%로 감소하며, 연기 개시할 경우 지급률이 1년에 7.2%p씩 증가하여 5년 연기 시 지급률이 136%로 증가한다. 사망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보험수리적으로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였을 때 과거 고금리 환경에서는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지급률 차이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고령화 및 저금리 환경에서는 62세에 개시한 노령연금에 비해 조기노령연금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고 연기노령연금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내용과 과제

조용운(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31호

일반국민 대상 건강검진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영국 등이고, 한국이 가장 광범위하고 자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2018년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통합하였고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던 것을 통합하고 근거중심의 검진을 강화하였다. 우울증 및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아 검진 횟수를 늘렸고, 40세와 66세에 실시하던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생활습관병이 증가하여 생애 4회로 확대하였으며, 생애 3회 실시하던 치매검사는 치매가 증가하여 66세 이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만족도가 떨어지고 대상자 선정에서 기존 질환자를 포함하여 중복검진 및 재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본인 동의하에 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송 사례와 정책적 함의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32호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퇴직연금 운영 관련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자실적 조작(일본 AJJ 소송), 기금의 사외적립 미충족 및 사내 사업자금 활용(영국 맥스웰 소송), 수탁자의 잘못된 투자(미국 알라바마 퇴직연금기금 소송), 무리한 연금급여 확대보장(GM 소송) 등과 관련된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퇴직연금 운영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수탁자책임 규제형태에서 수탁자별 책임 규제형태로 정책을 전환하거나 적립금 사기 및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가입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기금형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격한 수탁자책임 강화,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외국인 이동의 중요성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33호

우리나라는 그간의 출산 장려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출국자 수를 꾸준히 상회하면서 외국인 순유입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17년 이후 40만 명을 상회하여 출국자 대비 매년 10만여 명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주민등록 기준 168만 명, 인구 조사기준으로는 2017년 기준 186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유입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관련 정책 대응 체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율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으나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산업도 잠재적 고객군으로서 외국인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노화와 건강: 성공적 노화를 위한 과제

오승연(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34호

고령인구 비중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자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노후소득과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질을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 정책이 필요하다. 노화를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발달과정의 일부로 바라보고, 노년층을 사회적 인적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라는 구분기준이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건강나이와 능력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노화가 초래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와 여가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 목적의 인공지능, 홈케어서비스 등 민간영역에서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9호

일본 고베시는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피해자구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고령자 친화사회의 모범사례로서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구제제도는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지역주민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3천만 엔 한도의 위로금과 2차적으로 2억 엔 한도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환자가 일으킨 화재, 손괴, 절도, 폭행 등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제3자 피해자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보장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9호

스위스는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강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제도에도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수익률 보장(Guaranteed Minimum Interest Rat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채나 주식, 채권, 부동산수익률을 고려해 스위스 연방의회가 최저수익률을 결정한다는 점,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의 운용지시권은 배제된다는 점 등이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스위스처럼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0호

일본 보험업계는 간병사업이 미래 성장사업으로 전망하고 간병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간병사업 진출은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회사가 M&A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손보재팬클럽스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부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간병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일본과 같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현물급부 및 서비스를 급부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영국의 퇴직연금 신호등(traffic light) 체계 운영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0호

영국은 퇴직연금 이해관계자들의 위법사항 발견 시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신호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신호등 체계에 의한 검증결과, 연금자산과 각출금의 불법사용, 부적절한 기록관리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운용실패 등 적색위반 사항에 해당되면 보고의무자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할 보고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 시 민법에서 규정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위법행위 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국처럼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퇴직연금 운영관련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주요국의 사적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강화와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안소영(연구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1호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급을 유도하는 연금정책이 시행 중이다. 즉, 일시금 수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해외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는 일시금에 대해 40% 정률세율을 부과하고, 호주는 일정 이상의 일시금 수급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적정급여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퇴직소득 일시금에 적용되는 공제수준을 낮추어 이에 따른 여유 세원은 연금화를 유인하는 데 활용되도록 연금세제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연금상담서비스(TPAS) 운영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1호

영국은 연금가입자들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연금상담서비스(TPAS: The Pension Advisory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TPAS에서는 400명의 전문 상담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연금제도에 관한 상담서비스(자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내용은 연금금 파산 시 수급권 보호, 조기 퇴직 시의 권리 및 급여 등과 같은 연금관련 사항 등이다. 우리나라도 연금제도의 인프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연금포털서비스를 공·사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영국처럼 연금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상품 비교정보 제공 현황과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2호

개인연금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개인연금상품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품 정보는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자의 상품변경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상품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도 독일 리스터 연금의 사례와 같이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상품별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DC형 연금자산 증가와 자산배분 전략 변화

강성호(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3호

선진국의 DC형 퇴직연금 자산은 정부 지원, 근로자의 DC형 선호에 따른 적립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18년에 DB형 자산을 초과하였다. 한편, 선진국의 연금자산 투자 유형은 1998년 이후로 대체투자가 증가한 반면 주식 투자는 감소하는 등 투자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투자가 주식 및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감소 수단으로 선호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내의 퇴직연금도 단순히 실적배당형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유하기보다는 투자 다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활동적 여가에 대한 고령층 참여의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4호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고령층의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활동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육이나 여행과 같은 활동적인 여가의 경우 고령층은 낮은 참여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계층의 적극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동일 집단 내 상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보험회사는 고령층의 여가활동 관련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할 때 고령층 상호 간에 건강 및 생활패턴에 내재된 리스크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시간활용과 삶의 만족도

최장훈(연구위원) |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34호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노후의 시간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여가생활시간 중 TV시청과 낮잠 등 수동적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능동적 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을 선호하는 고령자는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수동적 활동을 선호하는 고령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의 여가생활시간과 '삶의 만족도' 및 건강과는 관련성이 크므로 능동적 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보험법리뷰 포커스

제1호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사고 책임 및 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나, 현재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특별 규정인 eKFV를 시행하여,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되 안전기준 및 보험 등은 자동차에 준하여 규제하기로 하였다. eKFV가 시행됨에 따라 독일의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내용에 준하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3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문제 및 규제 개선 현황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보험법리뷰 포커스

제1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그간 의료법, 보험업법, 정보관련 법 등 여러 분야 규제의 불명확성이 지적되어 왔다. 올해 5월 '의료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공표하였다. 그동안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업자의 법·규제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경감됨에 따라 향후 활발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장래 출시될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법제도적 장애요인 역시 한번에 파악하여 일소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법적 위험을 제거하고, 축적된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판단지침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방법 관련 분쟁조정사례 연구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

제1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해지 통지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

제1호

보험협회에서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2020. 1. 1. 시행). 모범규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운영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건수·선임 거부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험안내자료의 개선 필요성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

제2호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약관 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개선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상품설명서에서는 약관 조항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해당 보험상품에 특유한 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일상 생활 용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품설명서를 핵심 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

제2호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①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②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③ 입원적정성평가비용 분담방안, ④ 계약자 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 개정 사항들은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를 억제하며,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타당하나, 각 쟁점별로 요구되는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고, 형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관련 해외 사례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보험법리뷰 이슈 분석

제2호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영국, 독일은 2018년 EU 보험상품판매지침 시행을 계기로 각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보험상품 판매인의 보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보험판매인의 법적 지위 및 보험계약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 다른데, 보험회사의 업무수탁자로서 이를 대변하는 판매인(예: 보험대리점)은 통상 고객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수를 누구로부터 수령하는지만 고지하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판매인(예: 보험중개사)이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수수료(Fee)에 대해서는 금액고지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각국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입법적 개혁

김선정(동국대학교 교수) | KIRI 보험법리뷰 특별기고

제1호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자발적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답변의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강한 추세이고,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전부면책주의가 아니라 비례감액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전자정보의 고지는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하는 추세이다. 한편 계약전발병 부담보조항을 허용할지 여부는 나라에 따라 상이하나, 보험회사가 해당 조항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각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고지의무제도의 근거로 이해되던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적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현실에 적합한 개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19

II

2019년 주관 행사

정책·경영세미나
국제세미나
포럼
산학세미나

정책·경영세미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인슈어테크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행사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 주관행사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의 필요가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한 상품설계를 지양할 수 있도록, 과도한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실질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해 초회년도의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 되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계약 명확화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4. 17(수)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그랜드홀, B2F)
- 주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 사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발 표 :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상무),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이동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무),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개최배경

지금까지 판매채널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환기시켜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고 보험산업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 권유하고, 이는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하였다. 이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경쟁과 이를 활용한 판매자들의 이윤 추구에 비롯된 바가 크며 이는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여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행사명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 왔다.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화, 서민금융의 적극적 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4. 22(월) 14:00~16:00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 주제 :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발 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영준 (AIA생명 상무),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개최배경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정체에 직면하고 있다.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의 도약이 절실함과 동시에 개인들의 소득개선도 요구된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 왔다.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화, 서민금융의 적극적 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제들도 빼놓을 수 없다. 본 세미나에서는 2년간의 금융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사명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고용진 공동주최)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이 증가하고, 경상환자의 경우 동일 손상심도 및 상해등급 내에서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환자 간 대인배상보험금 격차가 크다.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 및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8. 23(금) 14:00~16: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B1F)
- 주제 :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 표 : 김규현 (홍익대학교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오현 (연세대학교 교수), 박영준 (단국대학교 교수), 윤종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개최배경

도로 및 자동차 안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상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는 중상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진료수가·심사·지급보증 등 일련의 보상제도가 환자의 부상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교통사고 처리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숙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행사명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보장을 달성과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비급여 보장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9. 5(목) 14:00~16:00
- 장소 : 코리안리빌딩 강당(12F)
- 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창환 (보험개발원 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과장)

개최배경

2019년은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보완적 민영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표준화를 도입했지만,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만연해 있고, 그 결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은 비급여 관리체계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공적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등 상호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행사명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의원 김병욱 공동주최)

예상보다 빠른 장수화 및 고령인구의 증가는 현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의 노후준비도 심각성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초고령사회도 그동안 예상되었던 2026년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 퇴직연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9. 27(금)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환영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
 - 발 표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권성훈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감독팀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장만영 (시니어금융연구소 소장), 조영행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표)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후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복지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재정문제로 인해 1998년,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복지재원의 한계로 공적보험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특히 개인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제46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해약과 지급보험금 증가, 수익성 악화, 자본비용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10. 8(화) 7:30
- 장소 : 조선히텔
- 주제 :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개최배경

세계경제는 2018년부터 무역과 산업생산이 감소세이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국면이다. 국내경제도 민간소비, 투자 등 민간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감소세로 경기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해약과 지급보험금 증가, 수익성 악화, 자본비용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료 전망을 제시하고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슈어테크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행사명 『인슈어테크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국회의원 전재수 공동주최)

2018년부터 일부 보험회사
가 몇몇 대형 요양기관과 전
산망을 연결하여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
나, 피보험자가 직접 전송하
는 방식이어서 해당 요양기관
에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혹
은 태블릿PC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설치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할 수
없어 저변확대가 어려운 상
황이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10. 25(금)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F)
- 주제 :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 표 :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개최배경

실손의료보험은 3천 5백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범국민적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제도
정비를 소홀히 하여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가입자는 청구를 빈번히 포기하고, 보험회사는 많은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청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직접 전송하면, 가입자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줄고, 보험
회사는 지급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회 전재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

행사명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 주관행사

최근 경제적·규제적 환경의 변화는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상체계를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12. 13(금) 14:00~15:50
- 장소 : 코리안리빌딩 강당(12F)
- 주제 :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체계 설계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이젠타 (경희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좌장 : 권영준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장권영 (보스턴컨설팅 그룹 보험부문 MD 파트너),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저성장·저금리 구조의 심화와 IFRS 17과 같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보유가치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소비자

분쟁·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영자 보상체계 구축이 보험산업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 현황을 평가하고 가치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체계 설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
-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행사명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국제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김장 법률사무소 공동주최)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활용과 재보험에 대한 회계적 인정 기준 제정을 통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 국제회계기준과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이러한 해외 사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강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보험회사들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은 보험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이 필요하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13:3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F)
- 주제 :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업 혁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부문 대표)
 - 세션 1.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 제1주제 :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 (백재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2주제 :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유럽보험회사의 솔벤시 II 대응사례 (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
 - 토론
 - 좌장 :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 토론 : 고인철 (DB손해보험 CRO),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Roberto Baron (메트라이프 금융그룹 수석부사장)
 - 세션 2.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업 혁신
 - 제3주제 :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4주제 :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활용 경험: AIG그룹의 사례 (Bill Zhang, 일본 AIG손해보험 CDAO)
 - 토론
 - 좌장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박광춘 (한국신용정보원 상무), 설인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원장),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개최배경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은 금융재보험이나 공동재보험과 같이 전통적인 재보험 모델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활용과 재보험에 대한 회계적 인정 기준 제정을 통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는 국제회계기준과 신진급여력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에 비해 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회사 내부의 빅데이터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보험회사들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은 보험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김·장 법률사무소 백재영 변호사는 제1주제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에 발맞추어 재보험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재보험서비스 Nardeep Sangha 최고경영책임자는 제2주제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유럽 보험회사의 솔벤시 II 대응 사례』 발표에서 솔벤시 II가 인정하는 재보험의 범위를 설명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리스크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박사는 제3주제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 AIG 손해보험 Bill Zhang 최고분석책임자는 제3주제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 그룹의 사례』에서 AIG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

행사명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 제12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글로벌 경기둔화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생존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10. 23(수) 9:00~15:30
- 장소 : 웨스턴 조선포털 그랜드볼룸(1F)
- 주제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
- 발표 및 토론
 - 개 막 사 :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 환 영 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 사 : 윤석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 기조연설 : Global Economic Uncertainty - Crisis of Insurance Industry
(Dieter Kroll, 하노버 리 아시아 총괄담당 이사)
 - 세션 1. 불확실성 확대 속 보험시장의 현주소
 - 제1주제 : Global Insurance Risk Horizon
(노동현, SCOR 글로벌 라이프 북아시아 대표)
 - 제2주제 : 국내 보험시장 동향과 위기요인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의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패널 : Dieter Kroll (하노버 리 아시아 총괄담당 이사),
 노동현 (SCOR 글로벌 라이프 북아시아 대표),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섭 (코리안리재보험 전무이사)
 - 세션 2. 성장 둔화되는 보험업계의 생존전략
 - 제3주제 : Insurance Product and sales Channel
(Tsuneto Yamauchi, 게이오대학 교수)
 - 제4주제 : Asset and Risk Management
(Yeung, Guy-WK AIA그룹 금융리스크관리 총책임자)
 - 제5주제 : 보험감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 실장)

○ 패널토의

- 좌장 :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
- 패널 : Tsuneto Yamauchi (게이오대학 교수),
Yeung, Guy-WK (AIA그룹 금융리스크관리 총책임자),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장),
정용호 (한화생명보험 리스크관리책임자)

개최배경

글로벌 경기둔화와 함께 투자 및 수출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경제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함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보험산업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우선 글로벌 경제 및 정치적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대재해 증가,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 저금리 환경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글로벌 보험산업의 지형도를 아시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짚어보았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보험산업의 위기 요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제·제도 환경변화와 성장성, 수익성, 자본건전성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품 및 판매채널,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감독정책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조망하였다.

이후 상품 및 판매채널,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감독정책 각 분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상품 및 판매채널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는 아시아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감독정책 측면에서는 IFRS 17 및 K-ICS 도입 시 영향 및 감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행사명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 주관행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채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변화를 먼저 겪은 호주, 미국, 일본 전문가의 소비자 보호, GA 그리고 전속설계사 변화와 효과를 각국의 전문가를 통해 나누고 토론하였다. 호주의 경우 강력한 소비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 역시 병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 11. 15(금) 14:00~17:30
- 장소 :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LL층)
- 주제 :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제1주제 : 호주생명보험 판매채널 개혁 사례
(Phil Anderson, General Manager of Association of Financial Advisers)
 - 제2주제 : 미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GA의 역할과 소비자 보호
(Stephen Yun, 미국 천하보험 전무)
 - 제3주제 : 일본 전속설계사 조직 특징과 시사점
(Shoichiro Ichitani, 일본 푸르텐셜 고문(전 사장))
 - 제4주제 :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5주제 :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보험채널 감독 방향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 국장)
 - 토 론
 - 좌장 :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 토론 :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동선 (글로벌금융판매 KLi 총괄대표),
이승배 (KB손해보험 전무),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개최배경

우리나라 보험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은 판매채널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업 측면에서는 GA를 중심으로 한 비전속 판매채널의 영향력이 전속판매채널만큼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사람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채널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먼저 겪은 국내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보험판매채널이 나아가야 할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발표

호주의 경우 보험회사의 전속판매채널은 존재하지 않으며 슈퍼에뉴에이션과 금융자문자(Financial Adviser, 우리나라의 GA와 유사)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한다. 호주정부는 2년 이내 해지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환수하도록 하였고 보험 판매 시 선취수수료의 비중을 최대 6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 이후 보험판매는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속판매채널과 GA채널의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GA채널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보험회사는 설계사의 3년간 유지율이 75%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판매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비대면 판매채널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등 니즈환기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보험상품의 경우 사람을 통하지 않는 비대면채널의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소비계층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험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계층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대면채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채널 도입을 위해 원칙중심의 사후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대면채널에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 인바운드 채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 활용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 IFRS 17에 따른 공정가치법 적용 시 불이행위험 반영 방법론
- 보험업계 규제 및 제도 현황과 과제
- K-ICS 2.0 계량영향평가와 향후 과제
- 고령화-저물가 사회에서의 금융: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실버이코노미(Silver Economy)시대, 금융의 진화
-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의 쟁점 -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IFRS 17에 따른 공정가치법 적용 시 불이행위험 반영 방법론

행사명 : 제28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개요

- 일시 : 2019. 3. 6(수) 16:00~17: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IFRS 17에 따른 공정가치법 적용 시 불이행위험 반영 방법론
- 발표 :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IFRS 17(보험계약) 경과규정의 공정가치법 적용 시 보험회사의 불이행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론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험업계 규제 및 제도 현황과 과제

행사명 : 제29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개요

- 일시 : 2019. 12. 23(월) 16:00~17:5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업계 규제 및 제도 현황과 과제
- 발표 : 권기순 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개최배경

보험가격자유화 관련 경과현황, 감독당국-보험회사-소비자별 자율화에 대한 입장, 보험 가격 요인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ICS 2.0 계량영향평가와 향후 과제

행사명 : 2019년 제1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행사개요

- 일시 : 2019. 12. 19(목) 16:00~18: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K-ICS 2.0 영향평가와 향후 과제
- 발표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해외 보험 자본규제 최근 동향 및 K-ICS 2.0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K-ICS 도입 시 예상되는 경영상 변화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였다.

고령화포럼

고령화-저물가 사회에서의 금융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사명 : 2019년 제1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행사개요

- 일시 : 2019. 11. 5(화) 16:00~18: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고령화-저물가 사회에서의 금융: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개최배경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의 길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포럼이 기획되었다.

실버이코노미(Silver Economy)시대, 금융의 진화

행사명 : 2019년 제2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행사개요

- 일시 : 2019. 12. 12(목) 16:00~18: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실버이코노미(Silver Economy)시대, 금융의 진화
- 발표 :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개최배경

저금리, 저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산업의 침체를 부추길 수 있지만 고령친화 산업이 성장할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포럼이 기획되었다.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의 쟁점 -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행사명 : 2019년 제1회 보험법포럼 | 주관행사

행사개요

- 일시 : 2019. 10. 30(수) 16:00~17: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의 쟁점 -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발표 :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금융상품판매인의 판매보수 고지조항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도입 적절성·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현실과 과제
-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과제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현실과 과제

행사명 : 산학보험연구센터 오픈 기념 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개요

- 일시 : 2019. 10. 10(목) 16:00~18:00
- 장소 :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13F)
- 주제 및 발표 :
 -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이론과 과제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현실과 과제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개최배경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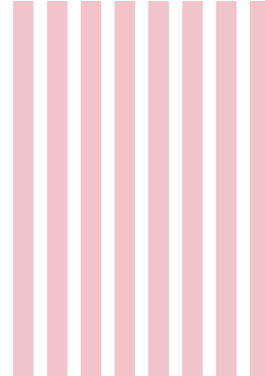
행사명 : 제2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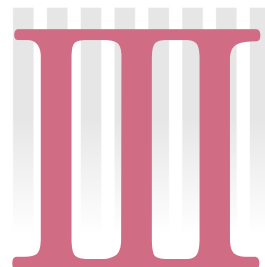
- 일시 : 2019. 11. 29(금) 11:30~13:50
- 장소 :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13F)
- 주제 :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부장)

개최배경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2019



2020년 주요 연구 계획

1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전속설계사 판매조직 구조개편과 운영에 관한 연구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나, 근로자와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최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및 노조가입 허용 등 법적 지위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의 큰 축으로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문제의 사회적 논의 국면에서 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도깊은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 모집채널 정비 및 온라인 모집과 광고의 구분 방안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모집과 단순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전통적 대면 방식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 모집 행위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의 장단점 및 방안

김규동(연구위원) | 보고서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만 허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보험대리점 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자회사가 아니라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등록 허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회사 고용 손해사정사 및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손해사정제도 및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손해사정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미국 의료자문제도 조사

조용운(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지급건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014년 5만 4천 건이었는데 2017년 9만 7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의뢰건 대비 부지급건수 비율은 60%, 2017년에는 59%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분쟁해결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변혜원(연구위원) | 보고서

소비자 민원의 상당한 비율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통합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내에서 소비자 보호는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외 회사 내 보험분쟁해결 현황과 모범사례와 국내외 금융분쟁해결 기구를 검토한 후, 보험민원 및 분쟁해결 개선방안을 회사 내 자율민원 해결과 독립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인슈어테크와 보험소비자 보호

최장훈(연구위원) | 보고서

인슈어테크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관련 소비자 보호 이슈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핀테크를 적용한 인슈어테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인슈어테크를 적용한 상품 판매 및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인슈어테크 환경의 점검이 필요하다.

2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보험산업 저금리 대응방안: 수익성 분석을 중심으로

노건엽(연구위원) | 보고서

저성장·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재무건전성 제도, 주주 배당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익이 필요하나 적정 수준 또는 최소 수준의 이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 지속가능을 위한 이익 수준 및 이익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보험회사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 생태계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경우, 보험업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서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계약이전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회사 수익성 하락 및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고, 향후 관련 규제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 저금리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금리역마진이 심화되고, 듀레이션갭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다. 이에 보험산업의 저금리 환경 취약성을 파악하고 보험회사 부실화 및 금융안정성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수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보험회사 부실사례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해외 많은 보험회사가 부실로 인한 위기를 겪으며 보험회사 부실의 원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해외 보험회사의 부실사례를 조사하고 부실의 원인과 경로를 분석하여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향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영 및 보험회사 감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방안 연구

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가입자의 실손계약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 인센티브 강화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일본 개인연금보험 상품 동향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보고서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개인연금보험 상품 동향을 파악하고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판매형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 보험상품과 관련한 세부통계가 부족하지만 관련 문헌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의 상품이 경제환경 및 제도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개인연금보험 상품 구조를 도출하고 도입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이해

강성호(연구위원) | 보고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인 퇴직연금제도는 2020년이면 도입된 지 15주년이나 되지만,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퇴직연금 도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의 운영, 규제, 감독,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연금총서 발간을 통해 퇴직연금의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퇴직연금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안전보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최창희(연구위원) | 보고서

현재 37개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소정의 금액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동 보험 가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금태섭 의원은 지자체 장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근거를 제시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보험소비 트렌드 분석

변혜원(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보험소비자 대상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문문항이나 조사방법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과 보험시장 변화에 대한 발상을 제공하고자 한다.

4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한상용(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저성장·저금리 구조의 심화와 IFRS 17 같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단기적 성과 추구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수체계를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 | 보고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10여년간 아시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영업실적이 미흡하여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과 가장 유사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경해상의 경우 해외시장의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해외진출 전략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의 신뢰도와 보험산업의 모델 해저드(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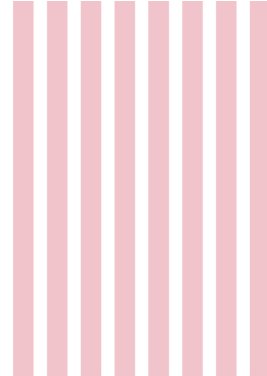
오승연(연구위원) | 보고서

개인화와 소득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정부 및 공권력은 물론 금융제도 등 기존 경제체계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하락하고 있다. 보험의 위험공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정직도와 신뢰도가 중요하다. 보험산업의 모델 해저드 증가 그리고 보험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영현(연구위원) | 보고서

경제, 금융시장, 인구구조, 제도, 기술 등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사업계획 수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구조적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산업을 전망하고, 보험산업의 당면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매년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보험회사의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보험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9

IV

2019년 연구 관련 활동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19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1호 (2019년 2월)

제목	저자
종신보험 해지율과 거시경제변수 간 장기 시계열 관계에 대한 연구	황진태, 서대교
민영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당뇨 유병자의 건강관리 차이 분석	김송희, 김용희
IFRS 적용을 위한 종신보험의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관한 연구	오창수, 정종국
고령층의 민영건강보험 수요결정요인과 잠재적 수요 분석	강성호, 김대환, 이순재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2호 (2019년 5월)

제목	저자
DNS 모형을 통한 금리 충격 시나리오 산출 및 분석	태현욱, 노건엽, 김병준, 장봉규, 박경국
Exchange Option Price Approach to Deposit Insurance Premium for Korean Life Insurance	JooHo Sung, Daehwan Kim, Donghwa Lee
산업경쟁도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송윤아
IFRS 17하의 확률론적 해지율 모형에 관한 연구	오창수, 송상욱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3호 (2019년 8월)

제목	저자
은행 및 기업의 자기자본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주동현
연금저축상품 성과 분석: 수익률 및 수수료를 중심으로	이경희, 김세중
가족기업의 친족등용에 관한 연구	강형철, 변희섭
Long Memory Volatility and Bernoulli Jumps in Daily Crypto Currency Prices	Young Wook Han

제목	저자
주택연금의 가입연령별 재무적 가치분석	최경진, 성주호, 성기환
저축은행의 보호예금자비중과 부도위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사회적 관계 및 학문적 전문성	하성수, 김학건
위험회피성향과 보험수요의 이론 및 실제	김대환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보험영업사원의 고객관계 형성 유형이 고객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현민, 전희주, 박찬욱

2.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은 경제·금융·보험 관련 환경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KIRI 리포트』,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 『최신 해외보험연구동향』을 발간하고 있다.

『KIRI 리포트』는 격주로 발간되는 웹 저널로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총 484호가 발표되었다. 『KIRI 리포트』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포커스, 이슈 분석, 글로벌 이슈, 금융시장 주요지표로 구성된다. 포커스는 경제, 금융, 보험산업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제공한다. 이슈 분석은 실물경제와 금융 및 보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핵심 정보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한다. 글로벌 이슈는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주제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금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보험동향』은 분기별로 연 4회 발간되며, 그동안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시장 동향, 해외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되었으나, 보험산업에 보다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년 여름호부터 경영환경, 보험동향, 해외보험 동향으로 개편되었다. 경영환경은 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금융·가계동향 및 규제·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보험동향은 보험회사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집계하여 성장성, 수익성, 리스크 및 시장경쟁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이사항 및 추세 변화 원인을 제시한다. 해외보험 동향은 주요국 보험시장의 흐름을 분석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는 보험회사의 분기별 경영성과, 수입(원수)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시장점유율, 자산운용 수익률, 판매채널 등을 분석하며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는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수입(원수)보험료, 수익과 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영문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최신 해외보험연구동향』은 보험 및 리스크와 관련된 해외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최근 해외에서 발간된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목록을 취합한 형태로 4주에 한 번씩 이메일로 제공되고 있다.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수요 변화, 보험 가입 행태, 보험산업 주요 이슈 등의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권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데이터와 통계치는 보험 소비자, 보험회사, 감독 당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일부는 보험 관련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조사 결과를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 활용 등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해 2019년 5월 시행되었으며,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 유무 등을 기준으로 추출된 유효표본(총 2,46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1:1 개별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보험 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기본조사는 보험 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이유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이슈 조사에는 개인·퇴직연금, 보험금 청구, 민원, 보험이해도, 보험가입·판매, 비대면 채널, 보험계약 전환, 건강생활서비스, 사고예방서비스, 자동차보험이 포함되었다.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9)

연도	주요 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형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 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 자산관리서비스, 대출 관련)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2012년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 보호
2013년	방카슈랑스 채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연도	주요 이슈
2014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LTC보험, 은퇴자산 선택행위, 세제적격 개인연금 저축, 은퇴 이후 소득원,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해약/효력상실 해지, 개인정보 보호
2015년	실손의료보험, 정년제,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노후소득 등의 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2016년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연금 보험 및 노후 생활 준비 실태,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2017년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연성보험사기
2018년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사이버보험, 자연재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노후생활준비 실태(연금, 종신보험)
2019년	개인·퇴직연금, 보험금 청구, 민원, 보험이해도, 보험가입, 판매 형태,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보험계약 전환, 건강생활서비스, 사고예방서비스, 자동차보험

4. 고령화리뷰

『KIRI 고령화리뷰』는 2019년 4월까지의 월간으로 발간되었으나, 그 이후 분기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1월, 4월, 7월, 10월에 발간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현상과 공·사적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시사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 관련 통계, 정책 및 연구 동향은 2019년 4월까지 수록되었으나 분기로 바뀌면서 중단되었다.

『KIRI 고령화리뷰』는 과거 연간보고서로 발간되었던 것을 반기별로, 그리고, 월간지로 개편되었다가 2019년 10월부터 계간지로 개편되었다. 『KIRI 고령화리뷰』는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는 포커스, 전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한 이슈 분석,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다루는 국내 및 해외 동향을 주요 항목으로 있으며, 2020년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하는 특별기고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문제를 포함하여 연금 및 건강보험 이슈에 대해 공·사적 부문 간 균형있게 다루면서 발간되는 정간물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KIRI 고령화리뷰』의 차별성과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다.

5. 보험법리뷰

2019년 10월 2일 『KIRI 보험법리뷰』를 창간하였다. 『KIRI 보험법리뷰』는 금융법센터가 주관하여 격월로 발간하며, 보험 관련 법·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이슈에 적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IRI 보험법리뷰』는 포커스, 이슈 분석, 보험법동향 등의 보고서 유형으로 구성된다. 포커스와 이슈 분석에서는 보험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하고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보험법동향에서는 보험법과 관련된 최근 입법 동향, 판례, 분쟁조정사례 등을 소개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가의 특별기고문도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다.

6. 각종 대외 연구 활동

6.1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FP학회
춘계세미나
“인구구조변화와
세대별 재무설계 및
관련산업변화”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FP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9. 4. 17(수) 14:00,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12층 강당
- 사회 : 최현자 (서울대 교수)
- 주제발표1 : 인구구조변화와 세대별 재무설계
(차경옥, 성신여대 교수)
- 주제발표2 : 인구구조변화와 보험산업변화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송수영 (중앙대학교 교수), 윤경호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한국보험신문, 제12회
아시아보험포럼,
“디지털 보험시대
대면채널의 경쟁력
제고 방안”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보험신문·중국보험보·일본보험매일신문
- 일시 및 장소 : 2019. 4. 18(목) 16:30,
대한상공회의소
- 사회 : 류근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주제발표 : 4차 산업혁명과 판매채널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차바 미치코 (일본 생명보험 석사회 고문), 키하라 미츠요 (일본생명보험 재무설계사협회 고문),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오영수 (감·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만영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황선찬 MDRT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연구원 ·
핀테크지원센터,
세미나, “글로벌
핀테크 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행사 내용

- 주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핀테크지원센터
- 일시 및 장소 : 2019. 6. 17(월) 10:00,
자본시장연구원 볼스홀
- 주제발표1 :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 모델
조사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2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3 :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시사점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 토론 :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김태훈(레이니스트 대표),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국회의원 고용진,
“실효성 있는 제조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행사 내용

- 주최 : 국회의원 고용진
- 일시 및 장소 : 2019. 9. 4(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필요성
(황현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연구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정찬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황다연 (법무법인 헤 변호사)



국회의원 민병두,
“초고령화사회대비포
럼 리스타트 KOREA
3주제:
Well-balanced
Life를 위한 준비”

행사 내용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 일시 및 장소 : 2019. 9. 20(목) 13: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 사회 : 장만영 (시니어금융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1 : 노화와 질병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2 : 지방소멸과 주거복지
(전영수, 한양대 교수)
- 주제발표3 :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 토론 : 김웅철 (매경비즈 교육총괄부장), 김희철 (희망만드는 사람들 대표), 고영삼 (동명대학교 교수),
원일 (세종시 복지재단 연구위원)



한국연금학회
2019년
퇴직·개인연금
공동세미나,
“환경변화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연금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7(목) 15:00,
금융투자교육원 801호 강의실
- 사회 : 김성일 (박사, 한국퇴직연금리서치)
- 주제발표1 : 저금리 시대 채권활용 퇴직연금
자산운용전략
(마경환, 글로벌채권파트너스 대표)
- 토론 : 정도영 (박사, 교보약사자산운용)
- 주제발표2 : 개인연금보험 판매 감소요인 분석과
대응방안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박준범 (박사, 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6.2 작업반, 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보험판매채널 건전성 제고방안 작업반을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각종 T/F

작업반 명 / 주최	참여자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작업반 / 금융위원회	변혜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작업반 / 금융위원회	김해식, 황인창, 노건엽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총괄 작업반 / 금융위원회	김해식, 황인창
풍수해보험 요율 개선을 위한 작업반 / 행정안전부	정성희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선 작업반 / 손해보험협회	기승도
비대면채널 활성화 작업반 / 금융위원회	정원석
지속가능 기후금융 스터디 실무그룹 / 금융감독원	이승준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 작업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기승도
IFRS 17 및 K-ICS 시행 대비 보험부채 할인을 개선을 위한 작업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황인창
공사보험정책협의체 / 금융위원회	이태열
맞춤형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작업반 / 금융위원회	김규동
공제조합 발전방안 작업반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김석영
공사 의료보험 관련 실태조사 작업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열
인슈어테크 규제개혁 전문가 작업반 / 손해보험협회	김규동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금융위원회	노건엽, 황인창
공동재보험 작업반 / 금융위원회	김석영

회의/자문/포럼

작업반 명 / 주최	참여자
우체국 위험관리위원회 / 우정사업본부	김해식
행정지도심의위원회 / 금융위원회	안철경
약관순화위원회 / 금융감독원	백영화
채권정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황현아
차등보험료율제 전문위원 / 예금보험공사	황인창
제안서 외부평가위원 / 인터넷진흥원	김규동
의료행위 범위 관련 민간합동법령해석위원회 / 보건복지부	양승현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 적합성 자문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성희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최장훈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금융위원회	변혜원
LAT 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 교직원공제회	김석영, 노건엽

7.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7.1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2019년 보험연구원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12회를 맞이하고 있는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포함하여 총 3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는 김·장 법무사무소와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2019년 1월 18일에 개최되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개최한 제12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를 주제로 2019년 10월 23일에 개최되었다. 보험연구원 단독으로 개최한 국제세미나는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11월 15일에 개최되었다.

공동세미나 (2019년 1월 18일)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소주제	발표자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	백재호 (김·장 법무사무소 변호사)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유럽보험회사의 솔벤시 II 대응사례	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그룹의 사례	Bill Zhang (AIG손해보험 CDAO)

제12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19년 10월 23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보험산업의 위기	
소주제	발표자
Global Economic Uncertainty - Crisis of Insurance Industry	노동현 (SCOR Re, 북 아시아 대표)
국내 보험시장 동향과 위기요인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Insurance Product and Sales Channel	Tsuneto Yamauchi (게이오대학 교수)
Asset-Liability Management In the Current Market	Guy Yeung (AIA그룹 금융 리스크 책임자)
보험감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판매채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소주제	발표자
Case Study of Life Insurance and Financial Advice Reform in Australia	Phil Anderson (General Manager of AFA)
US GA Distribution Channel and Consumer Protection	Stephen Yun (미국 천하보험 전무)
The Characteristics of Tied Agent in Japan	Shoichiro Ichitani (일본 푸르덴셜생명 고문)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보험채널 감독 방향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7.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자료 작성과 보험 및 사적 연금 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와 관련된 일련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 대한민국 OECD 대표부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거나 보험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 자료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위원회 회의부터 2019년 12월의 제104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 회의까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9년에도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와 보험 및 사적 연금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는 시장 중심의 보험 및 사적연금 시스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논의 주제로는 장기요양 및 건강관리의 공사협력, 사이버 리스크 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보험산업 활용, 보험 규제 및 감독 구조에 관한 지침, 장수위험 완화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시장의 현황과 주요이슈에 대해서 주요국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 내용을 정책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보험시장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7.3 보험연구원 방문 해외기관

보험연구원 방문 해외기관

일시	면담대상	논의내용
2019년 7월 25일	NN그룹	IFRS 17과 K-ICS 관련 한국시장의 움직임
2019년 8월 5일	대만 푸본생명	대만 푸본생명 본사 소개
2019년 8월 27일	IMF 현장점검 (FSAP)	K-ICS, 보험산업 동향, 리스크 취약점
2019년 8월 28일	싱가폴 투자청 GIC	한국보험상품 전반과 실손보험 현황
2019년 9월 19일	동양생명 이사회위원장	안방그룹 소개와 향후 보험시장 발전방향 논의
2019년 11월 5일	Cigna 본사 임원진	2020년 한국경제 및 보험산업 전망

8. 산학보험연구센터

산학보험연구센터는 보험업계와 학계의 소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계의 이론적 바탕과 업계의 실무적 지식을 공유하여 보험 관련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산학보험연구센터의 운영은 학계, 업계,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매월 개최하는 정기세미나의 주제를 선정하며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산학보험연구센터(한국화재보험빌딩 13층)는 북카페, 회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로 이루어져 있다. 북카페는 학계, 업계, 연구원 등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회의실은 산학이 서로의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소로 역할하고 있으며, 세미나실은 업계와 학계가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교수연구실은 학계와 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KIRI 산학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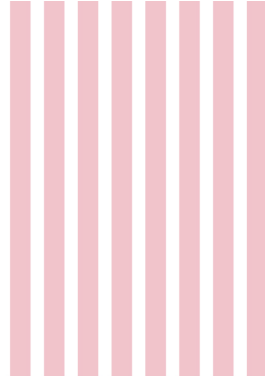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명 및 주제	발표자
2019년 10월 10일	산학보험연구센터 오픈 기념 세미나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현실과 과제』 -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이론과 과제 -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현실과 과제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2019년 11월 29일	제2회 KIRI 산학 세미나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과제』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부장)

9.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eGen Touch」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9년 12월 말 현재 단행본 25,000여 권, 정기간행물 100여 종, 비도서 자료 1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2019



일반현황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5대 안철경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9년 4월	5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3개사, 손해보험회사 17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 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19년에는 2019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에는 2019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9년부터는 연구자문위원회를 연구사업계획과 운영을 자문하는 ‘연구분과’와 보험산업 및 연구원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발전분과’로 나누어 구성하고 2019년 8월에 1차 연구분과회의, 10월에 발전분과회의, 11월에 2차 연구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4. 임직원 현황

(2019.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29	21	4	8	2	7	72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원장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성명	직위	최종학위
안철경	원장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부원장

-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궐위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

성명	직위	최종학위
조재린	부원장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감사담당직원

-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조치 및 관리
- 대내감사 수감업무 총괄
-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김세환	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연구조정실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기타 연구 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업무분야
임준	실장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연구조정업무 총괄
김선아	부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연구행정업무
장동식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 정보통계학 박사과정 수료	행사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홍보업무
이수정	담당	명지대학교 철학 학사	사무보조업무

동향분석실

-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국내 보험회사 재무분석
-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금융 및 경제 관련 주요통계의 집적관리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조영현	실장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전용식	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김세중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보험, 연금
김진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최원	수석연구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
김유미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최예린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석사	글로벌리스트, 보험
서명희	연구조원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손해보험연구실

-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에 관한 연구
- 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사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등에 관한 연구
- 가계 및 기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정성희	실장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보험계리사	응용통계(회귀분석, 실험설계), 보험계리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최창희	연구위원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 박사	보험계리, 경영과학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황현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수료/변호사	보험법, 상법
한상용	연구위원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기업재무, 리스크관리, 보험학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한성원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
홍민지	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거시경제
문혜정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계량경제, 거시경제
이유리	연구조원	고려대학교 언론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생명·연금연구실

- 일반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 관한 연구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공사연금에 관한 연구
-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규동	실장	Temple University 보험학 박사/보험계리사	보험, 보험계리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연금·보험 계리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김석영	연구위원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강성호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이아름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금융, 무역
안소영	연구원	Cass Business School, City University 경영학 석사	보험, 리스크관리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소비자연구실

- 소비자보호, 영업행위규제 등에 관한 연구
- 보험약관, 민원에 관한 연구
- 보험사기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 금융법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지배구조 등 보험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변혜원	실장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백영화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변호사	보험법
최장훈	연구위원	University of Minnesota 통계학 박사	요인분석, 다변량분석, 보험계리
양승현	연구위원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법학 석사/변호사	비교법학, 보험법
오승연	연구위원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박정희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이소양	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중국동향
이규성	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연금, 재무

금융제도연구실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 보험회계 및 세제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해식	실장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학 석사	보험회계, 재무건전성 평가
임준환	선임연구원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노건엽	연구위원	KAIST 수학 박사	통계(베이지안 추론), 재무건전성 평가
황인창	연구위원	KAIST 경영공학 박사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김동겸	수석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손민숙	연구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형법, 보험법
강해리	연구조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기획행정실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 관리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의전 및 비서업무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업무분야
김경환	실장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손해사정사	기획행정업무 총괄
홍성연	파트장	서울산업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사	회계, 출장, 규정 업무
이상운	수석담당역	동서울대학교 공업경영학 학사	자료실업무
이정환	파트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경제학 박사 수료	기획, 총무, 행사 업무
김형진	수석담당역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공인노무사	인사, 예산 업무
이성원	담당역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급여, 회계 업무
김형길	담당	서울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 학사	전산업무
성경은	담당	한동대학교 경영학 학사	총무업무
한해린	담당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학 학사	회계, 교육 업무

6. 연구센터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자본규제연구센터

-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심층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황인창	센터장	KAIST 경영공학 박사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금융법센터

- 상정되거나 상정 예정인 금융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정기보고서 작성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백영화	센터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변호사	보험법

미래보험센터

-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연구
-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임준환	센터장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고령화연구센터

-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와 보험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강성호	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글로벌보험센터

- 보험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정리
- OECD, IIS, LIMRA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석영	센터장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북한보험연구센터

- 북한 보험 제도 연구
- 북한 보험시장 진출 방안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황현아	센터장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수료/변호사	보험법, 상법

7.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정기간행물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관
보험금융연구	연 4회(2, 5, 8, 11월)	손해보험연구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8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8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KIRI 리포트	격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계간	고령화연구센터
보험법리뷰	격월간	금융법센터

용역보고서

보고서 명	저자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정성희 외 3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피해보상에 대한 기반 여건 조성 마련	황현아 외 2인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관련 주요국 동향(2019)	황현아 외 3인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책임 해외사례 연구	황현아 외 3인
미술품 관련 보험제도 개선연구	최창희 외 2인

2019 연차보고서

발 행 인 안철경
편집위원장 임 준
편 집 위 원 장동식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20. 1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